



Contents

권두언	지역이 미래이자 희망이다 _ 이원중	02
특집	충남 20주년... 그리고 지방연구원의 다짐	
	지방연구원! 현장에 답이 있다 _ 금창호	04
	최근 미국 싱크탱크의 연구방향과 충남연구원에 주는 시사점 _ 홍일표	08
	충남연구원의 미래와 비전 _ 송두범	12
충남논단	환경보전정책의 국내·외 사례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_ 명형남	16
	미래의 충남을 위해서는 R&D 육성이 필요하다 _ 전영노, 백운성	25
충남마을	꽃보다 아름다운 할매들의 공동체 '백석올미마을' _ 정봉희	30
열린마당	충남인터뷰-충남도의회	
	우리 학생들의 희망이 곧 충남의 미래! _ 홍성현	36
	정치는 싸움을 말리는 것, 갈등해결에 노력 _ 맹정호	39
해외리포트	토와다시의 예술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Arts Towards' _ 임준홍	42
상생+협력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모색 _ 고승희	48
	국내 지정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 _ 홍수열	56
오피니언	선진국 문턱의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_ 류순열	60
	디지털 시민성 교육 _ 황용석	63
충남소식		67
연구원소식		70
문화유산	홍성 홍주읍성	77

지역이 미래이자 희망이다

이원종 _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창의와 혁신에 토대를 둔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의 창조적 역량과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세계의 각 지역들은 창조적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교우위의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역주도로 관련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에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 주민이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는 한편, 지역별 비교우위의 특화산업을 창조적 관점에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생활권사업, 지역의 비교우위 장점을 살려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 특화발전사업, 농촌 오지마을과 도시 달동네 등 취약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핵심적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지자체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정책 조정 및 협업을 촉진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정책이 가속도를 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적 역할과 창조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역발전의 주역이라는 생각으로 주민,



지자체, 지역연구소, 대학 등이 서로 힘을 모아 노력할 때, 성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든 지역발전정책을 고려할 때, 충남연구원과 같이 전국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지역연구원들이 여건과 특성을 살려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창조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는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 사업을 고민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충청남도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정책들을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기획,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제안하는 일명 ‘역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제 차등화 방안, 역간척을 통한 하구생태 복원,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과정에서 충남연구원은 정책의 논리 개발은 물론 실제적으

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의 싱크탱크로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이 미래이자 곧 희망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민이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주체들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을 통해 그 요구에 화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희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충청남도를 포함한 전국토가 쾌적한 삶터, 꿈이 있는 일터, 즐거운 쉼터가 되고,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충남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가기를 기대합니다. ◀



특집1

충남연구 20주년...
그리고 지방연구원의 다짐

지방연구원! 현장에 답이 있다.

금창호 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1. 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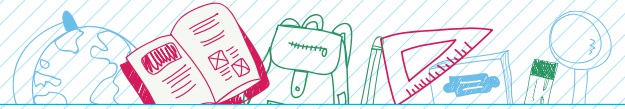
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1995년에 설립된 충남연구원이 급년으로 2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20년의 충남연구원 역사는 아마도 충남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여 왔을 것이다. 이는 충남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충청남도과 관할 시·군의 중장기 개발 및 지역경제진흥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의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과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함으로써 충청남도과 시·군의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력 향상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연구원의 성장도 충남의 발전노력과 그에 따른 연구수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연구원의 미래는 충남의 발전이라는 독립변수에 의존적인 종속변수로 국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충남과 충남연구원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고착적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충남연구원의 미래가 장미 빛이 될 수만은 없다. 충남과 충남연구원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 때 충남연구원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연구원만의 블루오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연구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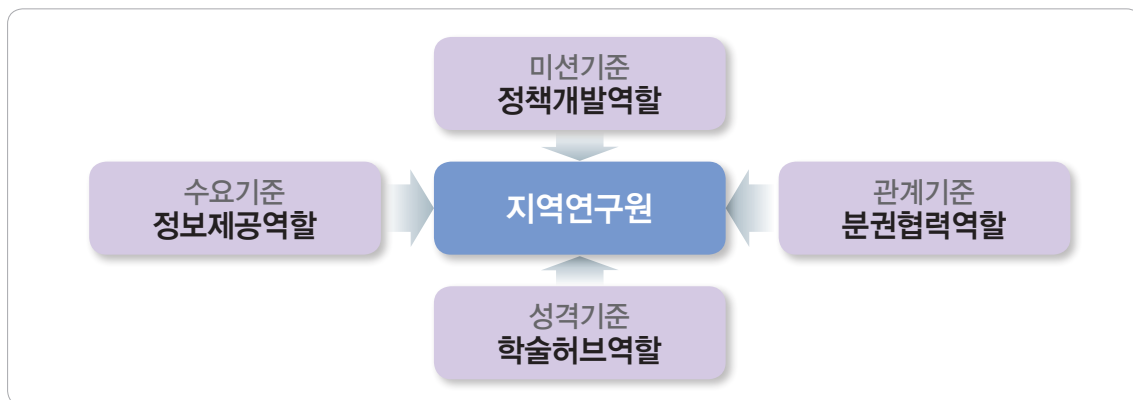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민선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였고,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 시도 독자적인 지방연구원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도가 독자적인 지방연구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방연구원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형태이다.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가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준용한 것이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로 시작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대체적으로 해당부처의 정책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정책개



〈표 1〉 시도출연연구기관의 설치목적

연구원명	설치목적
서울연구원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
부산 발전연구원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로 열린 환태평양의 거점도시인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광역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지역 산·관·학에서 공동으로 설립함
대구 경북연구원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개발 과제 및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개발하고, 지역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정리·체계화하여 이를 지역사회에 널리 보급·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대구경북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됨
인천 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의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설립됨
광주 발전연구원	광주 대도시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는 싱크탱크 역할 수행
대전 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의 중장기 개발전략 및 지역경제발전 등 시정전반에 관한 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 발전연구원	울산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인 시정정책개발·수립 및 교육·자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연구원	국가의 발전 및 경기도와 그 소속 시·군의 경쟁력 강화,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 발전연구원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전략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충북 발전연구원	충북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 부문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과 市郡의 중장기 개발 및 지역경제진흥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함으로써 충청남도과 市郡의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력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함
전북 발전연구원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
전남 발전연구원	전남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지방시대에 중추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여 살기 좋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남 발전연구원	지역경제·사회발전, 지역발전 분야에 관한 제반과제에 대한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주 발전연구원	제주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그림 1〉 지방연구원의 역할

발을 위해서 필요한 수요임에도 대학 등의 기존 연구기능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목적에 준하여 지방연구원도 유사한 목적에 기초하여 설립된 것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다수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정책개발의 수요가 발생되었고, 이와 같은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출연연구원을 설립하였다. 시도별 출연연구원의 설치조례를 근거로 설치목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해당 시도의 지역 개발 및 지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설립목적에 비추어 보면, 지방연구원의 역할은 시도별 정책수요에 충실히 부응하는 것으로 국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연구원에 기대되는 역할은 보다 포괄적이다. 지방연구원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요구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연구원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역할은 정책개발이다. 정책개발은 지역연구원이 설립된 목적이기도 하고, 또한 존립의 목적이기도 하다. 지역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

립과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이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개발은 지역연구원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초점을 두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인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역할이다.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에 관한 다양하고도 풍부한 정보를 지역주민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도 적절한 정보가 요청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정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은 지방연구원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학술허브로서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광역단위별로는 학술활동을 하는 각종의 연구기관과 대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활동들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지방연구원이 적당하다. 공동 정책연구나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회의장소 제공 등을 통해서 지역단위의 학술활동이 지방연구원을 매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한 협력적 역할이 필요하다. 비록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지역단위의 중장기 발전이나 현안과제

의 대안개발에 근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적 대응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될 필요가 있는 지방분권을 비롯한 자치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연구원 전체가 협력연구를 적극화하는 역할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지방연구원의 미래

지방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부침은 존재하고 나아가 지방연구원별 위상도 동일하지는 않다. 정부출연연구원들이 정권의 정책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달라져 왔듯이 지방연구원 역시 지역별 그리고 민선단체장의 정책기조에 따라 사뭇 다른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지방연구원의 위상이나 역할 나아가 미래는 독자적 구상이 어렵다는 것으로 귀착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연구원의 미래를 개척할 독자적 대안은 없는가? 아마도 그 해답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지역의 정책개발에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 발전의지와 정책수요에 따라서 지방연구원의 위상이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지방연구원의 미래를 독자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해답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은 다양성과 경쟁성이다. 달리 말하면, 지역의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다양한 접근방법이라는 것은 지역이 보유한 차별적인 자원과 네트워크, 그리고 목표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별 접근방법의 다양성을 최적화는 것에서 지방연구원의 역할을 찾을 때 그 미래는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개발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가 수요 중심적이었던, 이를 공급 중심의 관계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발전전략을 지방연구원이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시도와 시군구에 공급함으로써 공급을 통한 정책개발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지방연구원의 시도 의존성을 상대적으로 완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둘째, 정책개발의 접근방법을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인 다양성에 두는 것이다. 전술한 바이지만, 지역경제의 발전이란 동일한 목적도 지역별 차별적인 전략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지역별 보유자원 등의 차별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정책개발의 접근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는 관건이라 하겠다.

셋째, 연구내용의 현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술한 접근방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다양성을 제고하는 차별적인 정책개발은 지역의 현상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지역별 특성이 현장에서부터 철저하게 천착되어야 만이 비로소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적 정책개발을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연구내용의 현지성은 어느 연구기관보다 지방연구원의 장점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비중이 강화될수록 지방연구원의 역할도 중요한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연구원의 위상이 단순히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방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보다 발전적인 궤도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발상은 현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

특집2

최근 미국 싱크탱크의 연구방향과 충남연구원에 주는 시사점

홍일표 _ (재)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사회학 박사



미국 싱크탱크들의 특징을 가장 명확하고 간략하게 표현해 본다면 '아이디어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 워싱턴 DC에만도 400개 가까운 크고 작은 싱크탱크들이 수많은 이슈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idea)'을 다양한 형태로 매일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고,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고, 소속 연구원이 블로그나 언론매체에 칼럼을 싣는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까지 반영된다. 브루킹스연구소나 헤리티지재단, 미국진보센터나 미국기업연구소 등 세계적 싱크탱크 소속 연구자들 또한 이러한 '전장(battlefield)'과 '시장(marketplace)'의 격렬한 '전쟁'과 치열한 '검증'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자신이 만들어 낸 보고서와 제안한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에게 '시의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하면 안된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즉, 수요(need)에 대한 치밀하고 정확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핵심 화두는 '저성장' 과 '불평등'

그렇다면 과연 누가 싱크탱크가 만들어 내는 수많은 보고서와 그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필요로 하는가? 당연히 '정책결정자'들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하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싱크탱크는 커다란 원군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나 정보수준을 능가하는 정보를 민간 싱크탱크가 가질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그대로 '아이디어', 즉 '생각'이다. 더욱 복잡해지는 고차방정식의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싱크탱크와 소속 연구자들이 내놓는 제안들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 무엇보다 '시의적절'한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미국 싱크탱크 정책연구가 전혀 학술적이지 않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매달린다고 단정하면 그것은 큰 오해이다. 미국은 물론 세계가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문제, '저성장'과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화두를 붙잡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주요 싱크탱크를 거점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벤 버냉키가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 내에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했다. 버냉키는 현재의 '저금리·저성장' 국면에 대한 우려 섞인 진단을 내리면서도 본인 재임기간 동안의 저금리 정책을 비판했던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에 대해 날선 공격을 가했다. 서머스의 재정정책이야말로 '낡은 정책'이며, 적절한 '통화정책'과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현재 국면을 넘어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냉키는 2014년 1월 31일, 8년간의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직을 마치고 2월 3일부터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상근특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로렌스 서머스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복귀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미국을 구해내야 하는 특명, 소위 '오바마노믹스'를 티모시 가이스너 재무장관과 함께 수행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 서머스는 전 세계가 현재 가장 고민하는 또 다른 문제, '불평등'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담은,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서머스는 영국 노동당 그림자정부의 재무장관 에드 볼스와 공동의장을 맡아 1년 반 동안 미국진보센터의 "포용적 번영 위원회"를 이끌었다. 미국진보센터는 영국을 대표하는 진보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PPR)와 함께 '불평등 심화'에 맞서 '중산층 살리기와 민주주의 구하기'라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향상과 완전고용, 누구나 학비 걱정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교육 기회, 혁신적인 산업정책과 지역 클러스터 지원, 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는 기업의 장기적 안목, 그리고 국제 공조를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6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경제정책 방향을 미리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저성장'과 '불평등'이 비단 진보 싱크탱크만의 이슈는 아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이 벌이는 '아이디어 전쟁'은 '이념 전쟁'을 한 축으로 둔다. 민주당 계열의 브루킹스연구소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기업연구소가 만들어졌고, 공화당과 보수 세력의 대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 맞서고자 '진보관 헤리티지재단'을 내세우며 미국진보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세계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약화되고 있지만 '저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싱크탱크들의 해법이 한결같을 수는 없다. 헤리티지재단은 오바마 집권 6년 동안 과도한 '규제강화'가 이뤄졌음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 비해 2배, 금액상으로는 800억 달러 이상의 규제비용이 증가했다는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가 시급히 이러한 규제들을 없애야 미국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보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는 오바마보다도 더욱 강한 진보 성향인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반빈곤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불평등'에 대한 진보적 해법을 공격하고 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이들이 '저성장'과 '불평등'에 어떤 정책과 대안을 내놓을지 예측하고자 한다면 헤리티지재단과 미국기업연구소의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출발이 된다.

미국의 지역정책 생산과 싱크탱크 네트워크

브루킹스연구소나 미국진보센터, 헤리티지재단과 미국기업연구소 등이 내놓고 있는 아이디어와 정책들의 주된 청중은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결정자나 상하원 의원,



미국과 세계의 정책전문가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들도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수단을 활용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청중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이전에도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유력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해 왔지만, 그 범위와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워싱턴 DC의 싱크탱크들이 개별 주(州)의 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국내정책들은 연방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이를 자신들의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 주(州) 기반 싱크탱크들도 또한 실제로 적지 않다.

세계 싱크탱크의 현황과 특징, 변화에 관한 가장 종합적인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제임스 맥겐 교수가 2015년 2월에 발표한 〈2014년 세계 싱크탱크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는 싱크탱크가 총 1,830개가 있다. 이들 중 워싱턴 DC에 396개로 가장 많지만, 매사추세츠주 176개, 캘리포니아주 173개, 뉴욕주 146개, 버지니아주 105개 등 100개가 넘는 싱크탱크가 있고, 가장 적게는 3개에서 수십개씩의 싱크탱크가 각 주마다 있음도 조사되었다. 미국 싱크탱크가 정치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와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싱크탱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 정치와 정책생산구조에 더욱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진보'보다는 '보수'였고, '티파티'를 비롯한 미국 '폴뿌리 보수주의'의 위력은 개별 지역을 넘어 전국 수준의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정책포럼, 아이다호 자유재단, 펜실베이니아주의 커먼웰스 재단 등의 지역 싱크탱크들은 보수적 지역정책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들을 적극 후원하며 정책생산 및 유통구조에서 주도

권을 행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정책네트워크(State Policy Network, SPN)〉에 속해 개별 주의 경계를 넘어선 공동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2년 설립된 주정책네트워크는 '자유시장' 싱크탱크들을 모으고 지원하며,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는 주 차원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미입법교환협의회(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 ALEC)〉가 보수 성향 주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지역 싱크탱크들의 이와 같은 '횡적 교류'만이 아니라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하는 '종적 연계' 프로그램인 '자원은행(Resource Bank)'도 주목할 만하다. 헤리티지재단은 매년 전국 각지의 보수 싱크탱크 지도자와 활동가들을 모아 보수적 가치와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네트워킹을 돕는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이 행사가 지난 5월 6일부터 3일간 워싱턴주 벨뷰에서 열렸다. 여기에는 헤리티지재단의 주요 임원과 연구자는 물론 전세계로부터 초청한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대표자, 변호사, 정책전문가, 활동가, 블로거, 기부자, 선출직 공무원들이 수백명 이상 참여했다. 건강보험, 인종, 가족, 교육, 인터넷 자유, 정부개입 등에 대한 '보수적 가치'에 입각한 정책 세미나는 물론, 폴뿌리 조직화, 모금활동, 선거전략과 기술에 대해서도 토론도 이뤄졌다. 주정책네트워크는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후원자이자 파트너이며, 이를 통해 보수적 가치의 '지역화'와 '전국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지역 싱크탱크들도 적지는 않지만, 보수 성향 싱크탱크의 '종횡연계 네트워크'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진보연구소네트워크(Progressive Institute Network)'가 결성되어 대선과 집권 이후 다뤄져야 할 진보의제들의 선택과 조정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오바마가 집권 이후에도 헤리티지재단 '자원은행'과 같은 프로젝트로 발전하지도, 지속되지도 못하였다.

스무살 청년 충남연구원의 '이중적 역할' 과 새로운 과제

충남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과 외형적으로 유사한 조직이 미국 싱크탱크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충남 연구원은 헤리티지재단(또는 브루킹스연구소)과 주정책 네트워크가 하고 있는 역할을 '이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선 '저성장'이나 '불평등'과 같이 정책결정자나 대중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고 시의적절한 연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광역시도연구원 프로젝트의 주된 발주자인 지자체(예컨대 충청남도)로부터의 '용역수주'를 '정책수요'로 곧바로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충남연구원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충청남도청 부서나 충청도지사 개인만이 아니라, 충청남도 도민과 나아가 충청남도에 관심을 갖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중요한 '수요'의 원천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이나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추는 연구, 사후정당화에 동원되는 연구, 교통이나 건설 등 '개발시대'의 요구에 편중된 연구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국고보조를 받고,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논리와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모습 또한 벗어나야 한다. '지역'과 '기초', '지역 시민사회' 등의 현장성을 연구 대상과 주제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립성'과 '독창성', '현장성'을 강화해야만 연구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에 대한 충실한 대응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충남연구원과 같은 광역시도연구원은 해당 지역 싱크탱크들의 역량강화와 정보교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주정책네트워크가 '보수적 가치'라는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에 걸맞는 대상과

수단을 갖추나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 내 싱크탱크들에 대한 '자원배분'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재정지원에 적극적인 싱크탱크들 중심의 계약관계로 관계형성이 주로 된다면, 이것 역시 '수주'가 '수요'를 대체하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충분한 조사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충남연구원은 이제 충청남도 '안'이 아니라 '밖'까지 포괄하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이후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은 충청남도의 문제임과 동시에 전국적 사안이다. 충남연구원이야말로 독자적으로 이를 시작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수요에 대한 충청남도 안팎의 '전략적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연구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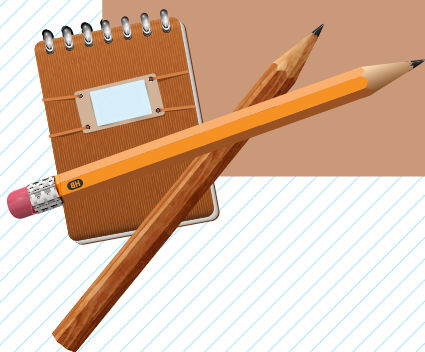
스무살 청년 충남연구원은 그동안의 충청남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들어졌던 안온한 '수주/발주' 관계를 넘어, 전국적인 사안에 대한 격렬한 '아이디어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또는 참여해야 함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충남연구원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 즉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수요'이기 때문이다. ◀



특집3

충남 연구원의 미래와 비전

송두범 _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충남연구원이 올해 6월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1995년 6월 15일 대전시 은행동에서 개원한 충남연구원은 5차례 청사이전을 거쳐, 2008년 공주시 금홍동에 등지를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간의 나이로 보면 20년이 긴 세월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역사로 보면 그리 짧다고 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2001)』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충청남도 정책개발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기능과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개원 20주년인 올해는 연구원 명칭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연구원상을 정립하는 한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충남연구원의 성장과정과 현재여건을 살펴본 다음, 미래지향적인 미션, 비전, 핵심가치를 새롭게 정립해보고자 한다.

충남연구원의 성장과정

충남연구원은 1995년 1월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같은 해 5월 충남도와 시군으로부터 기금 30억원을 출연받아, 6월 15일 대전시 은행동에 위치한 충청은행 건물에 11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개원하였다. 1998년 충청은행의 퇴출로 둔산동 사학연금회관으로 이전하였고, 2000년에는 계룡출장소(현 계룡시청)로 이전하였다. 2000년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2001년 연구원 육성조례는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로 개정됨으로써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근거를 마련하였다.

2003년 연구원은 또다시 유성구에 위치한 구충남농업기술원 청사로 이전하였고, 이듬해 연구원내 역사문화연구소는 “충남역사문화원”으로 분리·독립하였다. 충남역사문화원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2005년 개원 10주년을 맞은 연구원은 53명의 인력을 보유한 중견연구원으로 성장하였다. 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연구원은 2006년 대전 오류동 동아일보빌딩으로 이전하여 2년을 지내다 2008년 공주 금홍동에 연구원청사를 신축·이전하여 2015년 6월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충남연구원은 설립초기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흡, 재정지원 열악, 연구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남도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급증하는 연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 조직을 확충하고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충남의 변화를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성장하였다.

탄탄대로일 것 같던 연구원도 2000년 한때 연구원은 영과 관련한 갈등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받은 기억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력들이 타의에 의해 연구원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아픈 상처를 치유해가면서 연구원은 일취월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충남연구원의 현재

충남연구원은 현재 약120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성장하여 인력으로만 보면, 개원당시와 비교하여 10배 이상이 성장하였고, 기금조성액도 156억원으로 개원당시 30억원의 4배로 성장하였다. 조직은 4개부서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1실 1단 6부 6센터 1팀으로 확충하였다. 연구실적 역시 비교가 어려울 만큼 성장하여 명실공히 충청남도의 정책개발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비확보를 위한 논리를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상당수의 국비를 확보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와 시군, 도의회와 시군의회, 충남도민의 다양한 연구수요에 능동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연구만족도 및 정책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연구성과를 축적, 검색 및 공유하기 위해 지식포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연구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성과의 확산과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리포트, 인포그래픽스, 웹진, SNS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원내에 행복발전소, 노사협의회와 같이 구성원들

의 소통과 협력,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합의와 소통에 기반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출연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수탁과제에 의존하는 연구환경으로 매년 운영비 확보에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원 독립청사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증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원들의 연구환경의 양적·질적 수준은 그리 높지않은 편이다.

한편, 중앙정부 출연연구원의 세종시 이전으로 연구협력환경은 조성되었으나, 협소한 지역의 연구물량을 국책 연구원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무한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나, 이 역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어 연구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중앙정부 출연연구원의 세종시 이전으로 정보소통 및 공동연구의 용이성 등은 연구원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충남연구원의 미래지향적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

2013년 충청도청은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홍성·예산의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충청도청의 내포시대를 맞이하여 충남연구원 역시 환황해권시대 충청남도의 번영과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충남연구원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충남연구원이 새로운 50년, 100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연구원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충남연구원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충남연구원의 존재이유



를 분명히 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신념과 가치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션(Mission)은 연구원의 존재이유, 사명, 이념, 궁극적 목적 및 방향성을 말하고, 비전(Vision)은 연구원이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 성취하고자 하는 소망, 핵심가치(Core Values)은 연구원 성공의 DNA, 조직문화, 영속적이고 내적인 신념, 정체성사고 및 행동의 기준을 말한다.

『충남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충남연구원이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역사문화의 보존·계승,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남연구원 정관』에서는 충청남도 및 시군발전과 도정 및 시·군정 전반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행복과 지역경제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례와 정관에 근거하여 충남연구원의 미션은 ‘도민만족 정책, 도민행복 정책의 연구·개발 및 정책대안 제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충남도청이 새롭게 도래하는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원대한 꿈을 꾸면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고, 충청남도는 서해안 시대를 넘어 중국·일본·아세안 등 환황해권 국가 자치단체를 견인하는 시대를 꿈꾸고 있다. 충청남도가 환황해권 중심 자치단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충남연구원의 비전도 ‘환황해권으로 열린 창조적 지역연구 플랫폼(platform)’으로 제안코자 한다.

충남연구원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충남연구원의 핵심가치는 ‘지식공유, 변화주도, 실사구시(實事求是),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발전, 윤리적 연구’로 제시코자 한다.

지식공유는 충남연구원이 단순히 지식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창출·유통하고 활용하는 지식

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로 확장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충남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지식정보와 충남도와 시군, 도민 등이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저장 및 재생산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방과 공유함으로써 지식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남연구원은 거시적 메가트렌드, 미래사회 변화 전망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는 중국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주도하고 있고,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일컫는 일대일로(一帶一路)프로젝트를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주도의 세계경제 흐름을 파악하여 충청남도와 시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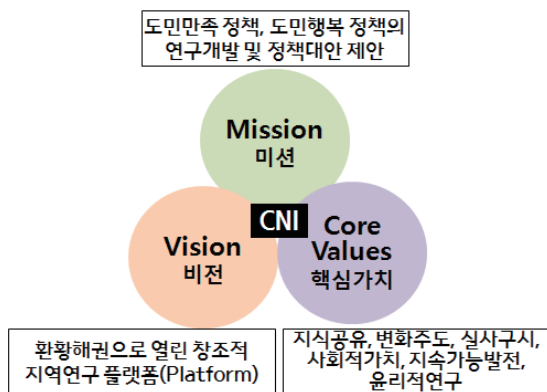
충남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충남도 및 시군발전, 도정 및 시군정에 대한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장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참여형 실사구시(實事求是) 연구를 통해 현장에 기초한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 분야 다양한 현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연구자중심의 연구가 아니라 연구수요자 중심적인 연구수행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충남연구원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원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많은 도민들이 경제, 사회, 노동, 교육, 문화적 차원에서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사회적 권리의 획득에 실패한 소위 사회적배제자를 경험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은 이러한 사회적배제자들을 주류사회로 편입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성장을 경험한 충남도 과거와 같은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윤리가 강화되고 있다.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나 학계에서 다양한 수준의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윤리는 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연구자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충남연구원 역시 최근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구윤리 준수요구가 강화될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윤리적 연구풍토 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그림] 충남연구원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예시)

이러한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충남연구원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책연구원, 지역연구원, NGO와 네트워크, 사회·경제·문화·환경생태를 포괄하는 분야별 네트워크를 통해 충남도와 시군,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수집·교환·제공하는 네트워크 매니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조사·연구기능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 관과 민간의 교류협력을 주도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충남연구원은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충남연구원이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충남연구원이 20년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충남도와 시군, 연구원 구성원과 충남도민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다. 그러나, 충남연구원에 대해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연구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한다 하더라도 존재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을 것이다.

연구원 스스로 자기혁신과 변화를 통해 충남도와 시군의 미래 청사진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연구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충남연구원은 연구원 설립목적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비전과 핵심가치를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연구원의 자기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 메가트렌드와 변화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충남도와 시군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주년을 맞이한 충남연구원이 미래 50년, 100년 이후까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시군의 정책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창조적 지식정보를 창출·유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성원 모두 가슴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10년사, 2005.



환경보건정책의 국내 · 외 사례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구축이 시급하다—

명형남 _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초빙책임연구원

충남은 그동안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환경보건, 안전, 건강 등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석면광산, 석탄화력발전소, 산업단지, 송전탑, 태안의 원유유출사고, 불산 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환경성질환자, 자연발생석면 가능지역 분포, 악취, 빛, 소음, 라돈, 기후변화 등 새로이 대두되는 환경위해요소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충남의 환경보건문제를 살펴보고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를 통해 충남의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충남의 환경보건문제

1) 증가하고 있는 충남의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충남의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표 1).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위해물질(IARC 1)을 배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에서 위해성이 큰 물질로 규정한 벤젠의 배출량이 32,671 kg/년으로 가장 많았다(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2012).

표 1. 충청남도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단위 : kg/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배출량	대기	2,915,008	3,033,590	3,097,040	3,105,351	3,334,265
	수계	6,628	7,590	10,920	10,201	10,891
	토양	0	0	0	0	0
	합계	2,921,636	3,041,180	3,107,960	3,115,552	3,345,156
이동량	폐수	16,723,806	22,114,799	23,683,391	24,588,849	22,323,101
	폐기물	37,881,681	28,080,791	38,311,820	42,296,798	41,855,118
	합계	54,605,487	50,195,590	61,995,211	66,885,647	64,178,219

자료 :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triopen/>)

2) 서산시 및 당진시에서 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반 차지

충남 서북부에 위치한 서산시 및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SOx(황산화물), TSP(총부유분진), PM10(미세먼지),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은 충남 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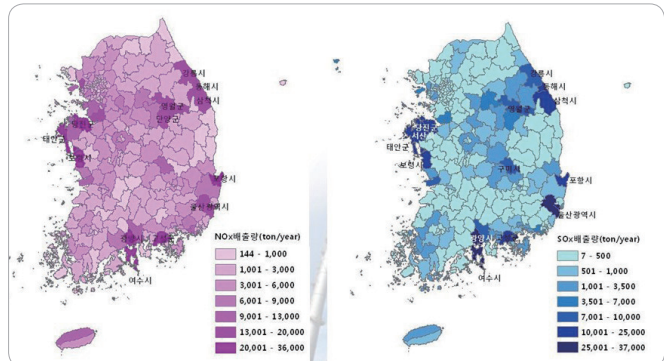


그림 1. 시도별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배출량 분포도 (국립환경과학원, 2011)

3) 충남 서북부 지역의 주민에게서 혈중 총비소 수치 및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다소 높게 나타남

충남도에서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북부 환경오염 취약지역(화력발전소, 대산석유화학단지, 당진철강단지) 6개 지역 주민 482명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국내 연구와 비교시 다소 높은 수준의 총비소 수치가 나왔고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조사 결과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당진 발전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충남 석면광산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석면건강영향조사에 의해 석면질환자 648명을 확인하고 치료하고 있다. 2013년에 환경부가 충남의 태안군 청산리광산, 예산군 대천리광산, 홍성군 홍성광산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 400㎡의 농경지는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양정밀조사가 추가로 실시된다면 석면오염토양 면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림 2. 태안군 청산리 광산 석면함유량 분포도 (환경부 보도자료, 2014.06.23.)

5) 유류유출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2007년 태안군 만리포 바다에서 유조선과 예인선이 충돌하여 원유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급성 및 중장기적인 건강영향피해를 평가하고 예방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6) 새로이 대두되는 환경위해요소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자연발생 석면 가능지역의 주민건강피해,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한 먹는물 건강피해, 환경성질환, 라돈, 기후변화 등 새로이 대두되는 환경요소로 인한 주민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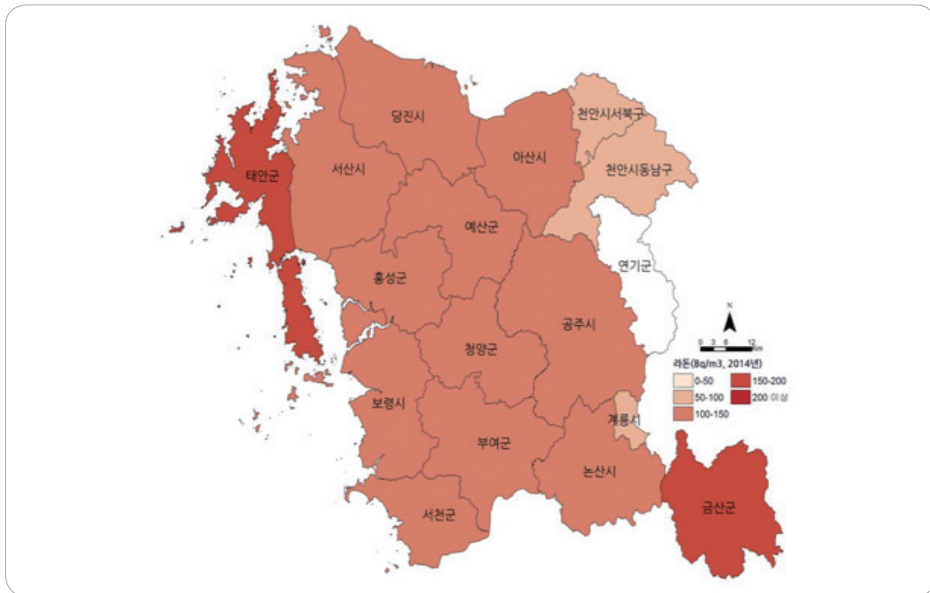


그림 3. 충남 시군별 겨울의 주택 라돈 농도 현황(생활환경정보센터, 2014)

■ 국내·외 환경보건정책 동향 및 사례

1) 국외

(1) 중장기 환경보건계획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은 2013년에 모든 지역사회의 공중 보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5개년 계획의 전략적 목표는 5개 분야에 걸쳐 수립하였으며 분야에 따른 세부목적과 우선순위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세부목적 달성을 위한 지표수준을 제안하고 2018년까지의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유럽연합 또한 2003년부터 유럽의 환경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강부담을 감소하고 새로운 환경물질에 의한 건강위험 규명과 예방 추구 등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보건정책

2011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발전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수은 및 대기 위해물질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기준안을 통해 매년 11,000 건의 조기사망과 4,700건의 심장질환, 13만 건의 천식 질환발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유럽연합은 대기오염의 영향에 대한 ①산전노출에 대한 알레르기, 천식, 신경발달 영향관련 출생코호트, ②호흡기질환에 대한 성인코호트, ③순환기질환에 대한 성인코호트, ④암발생률과 사망률에 대한 성인코호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전국 7개 지역의 어린이·보호자의 호흡기 질환 형태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대책 수립을 마련하고 있다.

(3)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환경보건정책

미국 환경보호청은 유해화학물질의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실시하여 가장 위해성이 큰 물질로 발암성은 벤젠을, 비발암성은 아크로레인으로 지정하고 위해성 크기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을 생산, 취급, 처리, 유통 및 보관하는 사업장에 대해 화학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요소 중 하나로 장외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 기업, 지자체, 환경청 등으로 구성되는 위험의사소통협의회(Risk Communication)를 운영하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정보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관련 소통과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있다.

(4) 석면관리 프로그램

호주의 퀸즐랜드는 석면관리 분야별 주정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석면관리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시기별, 내용별로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석

면 연구 분야와 포괄적인 교육 및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5) 생체모니터링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심각한 공중보건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성물질에 대한 국민건강의 노출수준 및 경향을 파악하는 생체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역시 생체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보건정책수립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6) 환경보건감시체계

미국은 환경보건감시체계를 통해 환경위해 요소와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자료를 지역별, 인구집단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하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환경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도 환경보건정보체계를 통해 환경 및 보건의 정보를 통합하여 과학적 근거의 자료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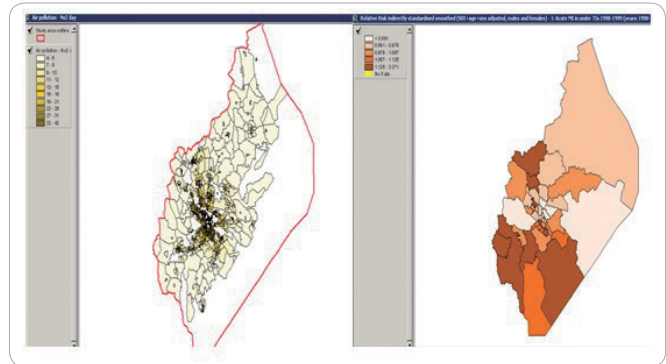


그림 4. 스톡홀름 지역의 이산화질소 농도와 급성심근경색 발생분포 비교 (유럽연합, 2012)

(7)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정책

미국 환경보호청은 대통령 직속 어린이 환경보호 T/F 설치 및 환경보호청 산하의 어린이 환경보건정책부처를 신설하여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을 전담시키고 있다. 유럽연합 또한 어린이 건강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여 어린이용품 관리방법, 장난감 안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납,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2) 국내

(1)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로는 환경성질환의 조사와 감시 및 예방과 구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 환경오염 민감 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기반 마련, 환경보건기반 선진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등을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종합계획」을 2013년도에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2012년부터 생활속 환경성질환 및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공중위생과’를 ‘생활보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보건정책팀, 공중위생팀, 생활환경보건팀, 감염병관리팀의 4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보건증진을 위하여 5개분야 24대 중점추진정책을 개발하고,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환경보건정책의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아토피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1년에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추진체계 확립, 예방교육 홍보, 생활환경 조성, 치유거점 조성 등 4가지 분야와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토피친식 안심학교 지정 및 운영, 아토피 안심마을 조성, 환경성질환 예방치유센터 설립, 치유의 숲 조성 등이 있다.

(3)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체계 구축,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환경오염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관리, 환경보건센터 협력 및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2년에 「충남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에 「환경보건조례」등을 제정·시행하였다.

■ 충남의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시사점

1) 충남 환경보건정책의 로드맵 구축 필요

국내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전략 및 분야에 따른 우선순위, 세부목표 등 환경보건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충남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추진과제는 나열되어 있지만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 기본방향, 목표 등이 빠져있는 형식적인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충남 환경보건종합계획(2017~2026)」을 수립할 경우에 추진목표, 정책우선순위, 세부단계별 명확한 목표 제시 등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부터 충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충남의 우선관리대상 물질 선정 필요

충남도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 등 위해성을 근거로 하여 우선적

으로 관리해야 할 관리대상 물질을 선정하여 대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충남의 환경보건 종합계획」 등에 포함시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3) 충남의 영유아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정책 강화

선진국의 경우 영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으로부터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충남은 영유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들을 확대·강화시켜나가야 한다.

4) 충남의 석면관리에 있어 사전예방정책 강화 필요

석면광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충남은 석면질환자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진행해왔다. 향후 석면 노출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석면폐질환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협력하면서 석면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5) 충남의 환경보건 정보체계 구축 필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위해정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단순 현황정보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충남의 정보를 보완해서 도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건강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6) 충남의 환경과 건강정보를 통합한 DB 구축 필요

선진국의 경우 환경과 건강정보를 통합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충남도는 환경과 건강자료를 통합하고 나아가 특정물질의 노출 등 건강영향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시켜 활용한다면 주민 건강피해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충남의 거점별 환경과 보건 관련 기관의 공동연구 및 사업 필요

선진국에서는 환경과 보건 관련 기관의 공동연구 및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단국대 의료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태안보건의료원의 환경보건센터, 지역 보건소,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역 거

점별 환경과 보건 관련 기관들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이 공동의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남의 주민건강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8) 생체모니터링 및 충남의 상황에 맞는 장기간의 코호트 연구 필요

선진국에서는 장기간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요인과 건강과의 관련성 및 매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인구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의 지역 코호트 연구나 생체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충남의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할 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환경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기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환경보건인력 및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환경보건인력과 사업, 예산 등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충남 역시 환경보건행정과 연구 등을 수행할 환경보건 전담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결론

충청남도는 환경보건정책을 전담하는 환경보건팀을 신설하고 「충남환경보건종합계획」, 「환경보건조례」 등을 제정·시행하는 등 환경보건정책에 있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의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보건정책의 로드맵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래의 충남을 위해서는 R&D 육성이 필요하다

전 영 노 _충남미래산업기획연구단 사무국장

백 운 성 _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들어가며

충청남도는 지난 90년 이후 전국 최고의 성장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부권 최대의 산업집적지역이다. OECD보고서(2009, 2013)에서도 충남지역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세계 10위권 지역 안에 포함된다. 충남은 2013년 기준으로 GRDP(지역내총생산)은 97.2조원(전국 4위), 1인당 GRDP 45백만원(전국 2위)를 기록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산업과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구기반시설과 연구개발수준은 항상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동안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는데 산업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은 왜 취약할까? 그 구조적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먼저, 그동안 충남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자. 충남은 서해안과 아산만을 끼고 항만과 고속도로 등의 사회간접



자본이 충분히 갖추고 있어 외국과의 수출입, 수도권과의 교류에 있어 최적의 산업 입지를 갖추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지역 기업의 신·증설이 억제되자,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북부권이 그 대안이 되었다. 1980년대 말 국가 3대 석유화학단지 중의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고, 90년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이 입지함으로서 산업의 집적이 가속화되었다. 대기업과 연관된 1차 벤처, 2차 벤처들이 함께 지역 내로 지속적으로 유입된 결과다. 이렇듯 충남은 대기업의 입지를 시작으로 산업이 발전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몇몇 업종, 소수의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집적화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충남은 산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부족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충남은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이자 주력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때이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연구개발과 창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기업 중심, 제조기반 산업구조에서 실리콘밸리(미국)나 바텐뷔르템베르크(독일)과 같은 연구개발이 풍부해 창업과 벤처, 강소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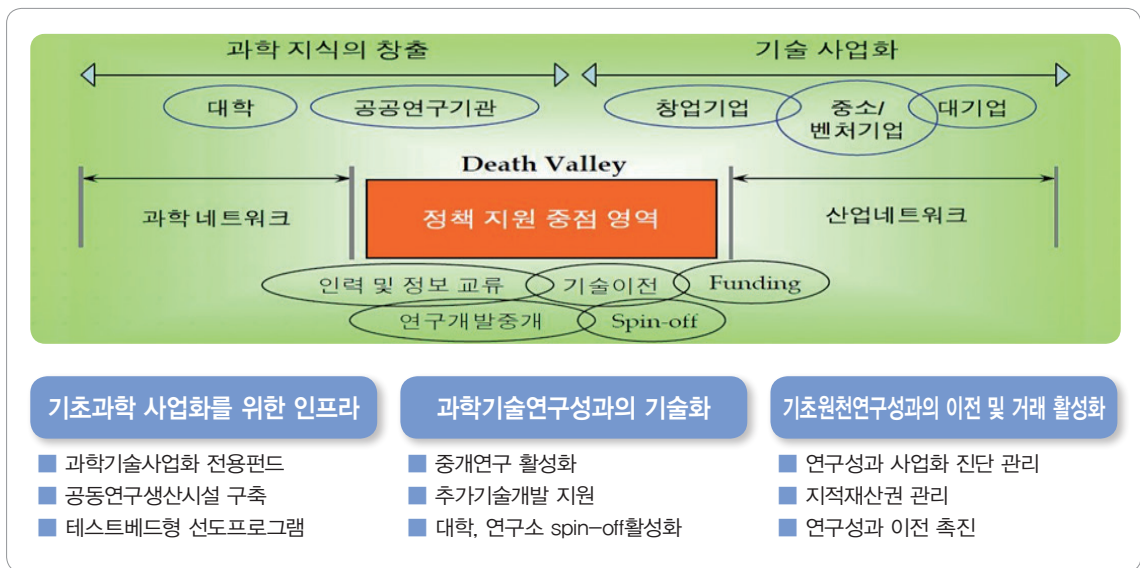
■ R&D가 풍부한 창조적 지역으로의 전환

기초R&D → 응용R&D → 사업화 → POST R&D의 선순환 구조 창출 필요

현재 충남의 R&D투자 수준은 낮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R&D투자 확대와 기반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충남의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18.3%로 전국 평균 12.2%를 넘어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 단계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벤처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각각 17.5%와 16.6%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생산구조가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의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공공 R&D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더더 창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대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충남의 R&D는 기업중심이며, 기업중에서도 대기업 중심의 R&D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소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공공R&D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것은 R&D가 기초R&D에서 응용R&D로, 다시 사업화에서 POST R&D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R&D지원이 필요한 창업과 중소기업에게는 필요한 R&D를 공급받을 공급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충남이 기초기술 R&D 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다. 현재 지역내 31개의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도내 대학의 특허와 기술개발 등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교에서 창출되는 지식활동과 지역산업활동과의 불일치(Mismatch)다. 실제로 충남에서 지식활동이 활발한 분야는 화학(공정), 기계, 재료, 에너지, 전기전자, 환경, 정보/지식 분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동안 충남의 주력산업들과 연계성이 부족했다. 그 결과 화학, 금속, 에너지, ICT 등의 산업은 주력산업에서 제외되어 지식과 산업이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도와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의 휴먼 특허를 출원받아 지역내 기업에게 R&D 등을 지원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도 검토할만 하다. 이와 함께 R&D의 가치사슬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연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충남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산·학·연·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1] 과학과 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책 수단

자료 : 하태정,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통합적 연구인프라 구축, 2008

창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한 응용기술 R&D인프라 확충이 관건

앞서 말한 기초, 응용, POST R&D의 연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연구기관 등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충남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위한 연구개발(기초과학연구개발, 특정연구개발 등)과

연구기반(선도연구센터, 기초과학연구단 등)은 전무한 상태다. 지난 10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누리,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연구기반(TIC, RIC, 특화센터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지만, 지역 내 “대학-출연연구소-기업”이 공존하며 상생·협력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은 아직 까지 요원한 상태이다. 이는 기초 및 응용R&D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중심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현재 충남은 연구중심대학이 없고, 지역 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제외하면 출연연구소가 없어 지역 주력산업인 IT분야(디스플레이, 2차전지, 태양광 외)의 기업들에게 신기술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술의 급속한 변화(외부충격)에 대응력이 약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내 연구거점시설의 부족은 기초·응용기술 역량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한다. 즉, 충남의 산업 특성에 맞는 핵심기술을 연구하여 기업으로 이전하는 출연(연) 혹은 분소 등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개발협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고급연구개발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지역내 유치가 절실한 이유다.

구 분		특 성		과 제
		장점	단점	
충남 연구 개발	R&D투자	기업 R&D 투자의 규모의 급격한 증대	대기업중심 R&D	· 과학기술의 지역화(토착화) 유도 · R&D, 특히, 산업연계 강화
	대학 및 연구기관	높은 연구인력 집중도	논문, 연구 질적 수준이 뒤처짐	· 지역산업과 연계 대학특성화 유도 · R&D 연구기관 유치, 집적화
	사업화	-	사업화의 연계성이 낮음	· 신생벤처기업 육성 토양 만들기 · 기술이전 생태계 조성

[표 1] 충남 과학기술역량의 특징과 과제

R&D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와 다각적인 투자재원의 확보 필요

R&D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의 산업과 R&D를 체계적으로 이끌 조정기관(Control Tower)의 역할 정립과 재원의 확보에 있다.

먼저, 지역의 산업정책과 R&D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추진기구의 부재가 가장 크다. 충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재원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을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 즉, 지

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고, 기관 설립과 지원을 통해 R&D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각 부처의 사업이 지역에 각각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서로 사업간의 중복성이나 연계를 고려한 체계적 사업추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R&D의 관리와 육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 컨트롤 타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컨트롤 타워가 현재의 과학기술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테크노파크가 될 수도 있지만 충남 과학기술 R&D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추진체계와 함께 재원의 문제를 함께 들 수 있다. 현재 산업관련된 예산은 대부분이 지역 산업정책의 예산(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지원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형국책사업(예비타당성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차원의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자주재원의 마련, 외부 유희자본의 유치 등 R&D를 활성화시킬 다양한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기술개발 정책과 지역의 기술개발 정책을 연계하는 전략과, 지역 주도의 R&D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마련과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나가며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충남은 국가기간산업과 IT기반의 성장동력산업의 집적지로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해 왔다. 앞으로의 20년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의 산업으로 과연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비옥한 토양에서 나무와 풀들이 자라듯이, 경제저변의 기반이 확충되어야 창업과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과 기업의 연계고리를 확충해 기술과 인력의 이전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갖추고, 창업과 벤처기업이 지역내에서 육성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이 풍부한 여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중심의 거점기관과 총괄적으로 코디네이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정립도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다. R&D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도 충남이 미래로 가기 위해 현재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다. ◀

참고자료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업발전종합계획, 2014.

충청남도, 충남경제비전2030 제5차 경제비전위원회 자료집, 20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2015.

충남미래산업기획연구단, 충남 과학기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2012.

하태정,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통합적 연구인프라 구축, 2008

OECD, Regions at a Glance, 2009, 2013

꽃보다 아름다운
할매들의 공동체

‘백석울미마을’

정봉희 _ 충남연구원 홍보팀장

충남에 ‘꽃보다 할매’가 있다? 지난 2월 KBS 다큐3일 프로그램에
당진 백석울미마을의 할머니들이 출연했을 때, 왠지 모를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평균연령 75세의 시골할매들이 사업 시작 3년만에 어떻게 연매출 3억을 넘기고
평균연봉(?) 2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해진 것이다.
사실 이 마을은 예전부터 들러보리라 다짐했던 곳이었는데, 마침 팔자가 몸담고 있는
연구원 봄 농활을 겸해 취재할 수 있었다.



백석올미영농조합, 그리고 57명의 대표

지난 5월 현재 이 마을 영농조합원은 57명인데, 이중 남자는 3명 뿐이고, 나머지 54명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81세로 가장 연세가 많은 이계영 할머니부터 50세의 유희숙 막내(?)까지. 그리고 이들 모두가 사장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 조합은 할머니들이 대부분일까? 그건 바로 이 마을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자1은 김금순 대표의 남편, 남자2는 농장 관리인, 남자3은 귀농인! 끝이다. ^^

조합원의 연봉은 대부분 급여와 농산물판매수익, 그리고 조합수익 배당액을 합산해서 결정된다. 급여의 경우 상시 근무가 월 120만원, 주3회 근무가 월 60만원, 그리고 일당 4만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조합원 1인당 매년 평균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취재를 해보니 올해는 벌써 목표 매출액 4억5천만 원을 넘어설까봐 걱정일 정도라고. 우습게 생각했던 지상과 프로그램의 홍보효과 덕을 톡톡히 본 셈인데, 제품을 만들어낼 농산물이 거의 떨어져버렸다고 한다.

필자가 '그럼 다른 곳에서 재료를 사다가 만들면 안 되느냐?' 했더니 박민영 사무장은 '그건 우리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만 가공·생산한다는 조합

백석올미영농법인
'박민영 사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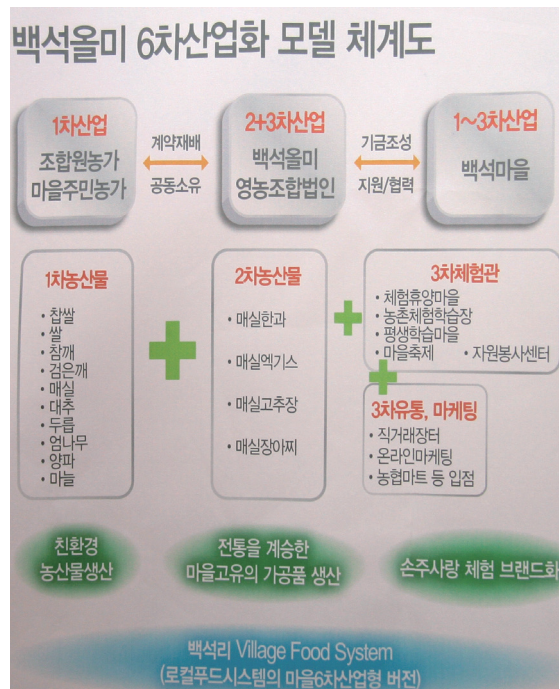
매실한과 등
백석올미영농법인의
가공생산물



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마을 이름 '올미'에 담긴 '최고의 맛을 지향'한다는 맥락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이 아시다시피 이 마을은 농산물의 수확, 가공, 체험 및 관광 등이 결합된 6차 산업화의 우수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시행한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올미마을의 6차산업화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마을 주민과 조합원 농가는 1차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2차는 마을 고유의 전통방식으로 매실한과, 매실엑기스, 매실고추장 등을 가공해 생산한다. 그리고 3차는 체험사업과 직거래장터, 온라인마케팅 등의 브랜드 이미지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백석리 '빌리지 푸드 시스템'이라 불리는 백석올미의 6차 산업화 모델이다.



백석올미의 6차산업화 모델 체계도

할머니들의 반란은 계속된다!

102가구 250명이 살고 있는 조그만 시골마을... 농한기가 되면 집이나 노인정에서 고스톱 치는 게 유일한 재미였던 할머니들은 평생 처음으로 본인 이름이 찍힌 명함을 만들고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할머니들이 많아서 일이 어렵거나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말 그대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김금순 대표는 "이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능동적인

마을주민들의 결속력과 추진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처음 33명으로 시작된 조합원은 지금 5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체험객 수는 1,800명, 매출은 3억5천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마을은 체험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할머니와 함께 매실한과 만들기, 비빔밥 만들어 먹기 등 시골고유의 정서가 녹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다목적 실



내·외 체험장, 마을 민박(펜션), 한과공장 및 조청공장 등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올미마을 할머니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웃음과 정겨움이 곧 이 마을의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인 셈이다.

충남연구원이 이 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보다 손수 만들어주신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더 가득했다. 아무래도 시골 고향에 늘려온 듯한 친숙함과 포근함 때문이 아닐까 한다.



백석올미마을
풍경들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할매들의 공동체

김금순 대표(65)는 7년 전에 이 마을로 귀농해 봉사활동을 하던 중 마을 이장님의 추천으로 공석이던 부녀회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영농법인을 만들게 되었고, 초반에는 비회원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열린

토론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고 오해와 불신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김 대표는 운영자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 기업을 신청하고,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는가 하면, 한과제조과정의 기술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자비로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임원(대표, 공장장, 총무)들이 관련 전문교육을 배우도록 해 각자 자신들의 제조기법을 고집하는데 따른 불협화음을 없애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할머니들이 단제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70평생 처음 극장체험을 했다는 할머니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노년의 경험을 주민들이 함께 추억



백석올미영농조합
‘김금순 대표’

잘 익어가고 있는 백석올미의 매실





약500년 된 백석올미마을의 회화나무


으로 쌓아가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우리 마을만의 요양원을 만드는 게 꿈”이라며 “일명 ‘올미 타운’을 지어 나이 들어 힘없고 외로운 할매들이 죽을 때까지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우리 할매들이 매 실처럼 탱글탱글하게 늙지 않고 젊게 사는 이유는 바로 함께 웃으며 바쁘게 일하기 때문이 아닐까”한다며 “지금 각자 살고 있는 집들은 나중에 자손들이나 귀농인들한테 물려주고 우리는 우리의 또 다른 삶을 죽을 때까지 어우러져 살 것”이라고 희망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을만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들지만, 김금순 대표가 부러워하는 마을도 있었다. 아산외암마을의 훌륭한 어메니티 환경, 학교급식으로 연매출 70억을 올리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자리잡은 흥성거

북이마을 등이라고.

어쨌든 백석올미마을은 ‘노인네들이 더 이상 뭘 하겠더라’는 체념을 ‘우리도 뭔가 꿈을 꿀 수 있어’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아주 가치있는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닛하기 이전에 이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도전을 현실로 바꿔놓은 올미마을 할매들이 너무나 예뻐(?)보였다.

이 마을 한가운데에는 약500년 된 회화나무가 있다. 한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움츠러들고 있었지만 봄이 되자 어김없이 새잎이 돌아나는 생명력도 대단하다. 여기에 마을 할매들의 건강한 웃음꽃이 한 나무 가득하길~ 그래서 이 행복바이러스가 민들레 흩날처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멀리 퍼져나가길... 



충남인터뷰 - 충청남도의회

우리 학생들의 희망이 곧 충남의 미래!



홍 성 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약력 경북대학 세무회계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중, 제8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충남복지재단위원회 이사



△ 정치 입문 계기?

☞ 처음에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주변 분들의 추천도 있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

☞ 먼저 기억에 남는 일은 차량지원이 없던 방법대원들에게 2009년 차량을 지원해 준 일이다. 기존에는 방법대원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나 되나! 그래서 방법대에 차량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도에 요청을 했다. 하지만 답변은 법인이 아니라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방법대가 법인이 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시골지역은 방법대원들의 활동이 꼭 필요한데, 꼭 법만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 다시 한 번 검토 요청을 했다. 결국엔 당시 도지사님과 도의원들을 설득하여 공동으로 준비를 시작했고, 천안시장에게 권고하여 획기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전국 최초로 모든 학교에 100% 에어컨을 설치해준 일이다. 의원은 남이 안하는, 아니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이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 교육위원장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

☞ 10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게 됐다. 위원장으로서 충남 지역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시설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충남은 시골과 도시가 얹혀있는 복합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농촌지역에는 교육시설이 많이 낙후됐다. 도시지역과 완전히 똑같은 조건까지는 어렵겠지만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8대 도의원 당시 충남 초등학교에 40%, 중학교에 60%, 고등학교에 80% 밖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임기 2년 동안 전국 최초로 100% 설치를 한 것이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 천안은 수도권이라 1시간 이내로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교육인프라나 사업·기업 인프라를 잘하다보면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천안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다가 조금 주춤하는 상태이지만, 수도권에서 가깝고 대학도 많고 우리 시나 도의회



에서 노력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천안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 첫째는 균형발전(구도심과 신도시) 문제이다. 천안시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시골은 발전이 안 되고, 시내중심 서북부쪽으로만 발전되다 보니 격차가 심하다.

두 번째는 천안역사 개발문제이다. 현재 천안역이 65만 도시의 역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이 문제는 도지사님과 천안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내로 개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수영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종합운동장내에 작은 수영장 하나가 있다. 65만 도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문화 활성화에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는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남구에 예술의 전당은 있지만 서북구에는 없다. 또한 큰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선 대강당도 필요하다. 동남구에 있는 동서홀은 일반 시민이 사용하기 어렵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언제나 대관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좋은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전용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안에는 학교도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학생들을 위한 전용 체육관이 하나도 없다.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성적에만 연연해하지 말고, 그 운동을 학생 누구나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체육관부터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충남연구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충남발전연구원, 아니 이제 충남연구원으로 바뀌었지! 충남연구원은 우리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을 잘해왔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만큼 앞으로의 기대도 크다. 도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를 해주길 바란다.

대담 : 충남연구원 오혜정 환경생태연구부장
사진 및 정리 : 충남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정치는 싸움을 말리는 것, 갈등해결에 노력” 대한민국에 화두를 던지는 충남이 되어야



맹 정 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약력 충남대학교 졸업,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제9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현)제 10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 서해안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 정치 입문 계기?

☞ 20대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고향 서산에 내려와 시민운동을 했다. 당시 서산의 시민운동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시민운동하면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늘 고민해왔다. 시민운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시민운동 영역을 너무 좁게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 생활영역 모든 것이 시민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과 정치영역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정치도 시민운동의 한 영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입문하게 되었다.

우리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갈등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정치를 하기 전에는 어느 한 편에 서서 싸움을 걸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끝이 없고, 이기는 경우도 드물었다. 정치를 잘 하면 싸움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순진한 생각이
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

☞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석유화학 공단인 대산지역
환경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 대산지역 환경문제와 관련
하여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달랐고, 기업과 주민 간에는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복지부동을
원망했고, 기업들은 행정기관의 감시를 두려워했다. 행정
기관과 기업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저는 포기를 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 대산지역환경협의회를 어렵게 만
들 수 있었다. 지금 이 협의회는 대산지역의 환경을 논의
하는 권위를 가진 협치기구가 되었다. 역지사지(易地思
之)의 자세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믿음을 얻었다.

△ 교육부위원장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

충남교육은 지금 변화가 화두이다. 역대 교육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간에 낙마하면서 충남교육이 큰 위기
를 겪었는데, 이제는 잃어버린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중심의 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를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충남교육
의 최대 화두였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매진하고, 열
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와 경중을
가려 살림도 알뜰하게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저는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었는데, 학창 시절 저에게 관심
을 보여 준 교사의 과목 점수가 높았다. 교육과정이나 환
경도 분명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다. ‘힘
들지? 그래 힘내자!’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선
생님이 많아지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자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서산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충남도와 서산시는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를 대산까지 연장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대산공단에서 1년에 납부하는 국세가 약 4조원, 반면 지방세는 국세의 1%인 400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대산연장은 어찌 보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전향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서산의 경우 자동차산업을 클러스터화 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서산에는 모닝과 레이를 생산하는 동희오토가 있지만, 나이가 기아나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의 완성차 공장을 유치해야 고용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서산은 넉넉한 곳이다. 일자리가 많은 기업의 유치를 통한 경제의 활성화, 이를 바탕으로 한 넉넉한 복지,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정한 행정은 어느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웃 사람들이 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좋아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충남연구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충남연구원이 충남도라는 지역적인 범주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화두를 던지는 연구원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구나 갯벌 생태의 복원, 발전소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위한 3농혁신, 독거노인 생활공동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

대담 : 충남연구원 김찬규 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토와다시의 예술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Arts Towada'**

임준홍 _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아오모리현 토와다시는 예술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Arts Towada'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Arts Towada' 프로젝트는 토와다시 중심상점가와 인접한 1.1km의 상징거리인 '관청가(駒街道)' 전체를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스트리트퍼니처를 만들고, 다양한 예술작품과 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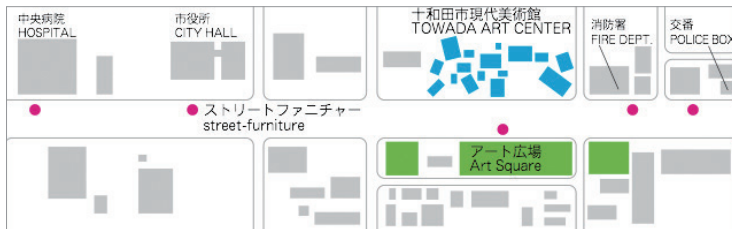
2008년에는 토와다시현대미술관이 개관되었고, 2014년 봄에는 미술관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체험 가능한 대형예술작품이 전시된 아트광장이 만들어져 있다. 또한 '관청가' 보행로에는 스트리트퍼니처형의 예술작품들이 만들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교류하며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구 6만 명의 작은 도시에, 개관이후 100만 명이상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게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도쿄 근처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Arts Towada'는 토와다시 시장(市長)의 예술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으며, 과거 이 지역에서 전투말(馬)을 육성하던 장소적 특성이 'Art'와 결합한 프로젝트이다. 특히, 일본의 대부분의 마을만들기에서 강조하는 주민으로부터의 사업이 아닌 시장(市長)의 판단과 끊임없는 시민을 향한 설득과 참여로 지금의 결실을 맺었다.





* 자료 :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홈페이지 'Arts Towada' 의 봄



* 자료 :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홈페이지 'Arts Towada' 야외예술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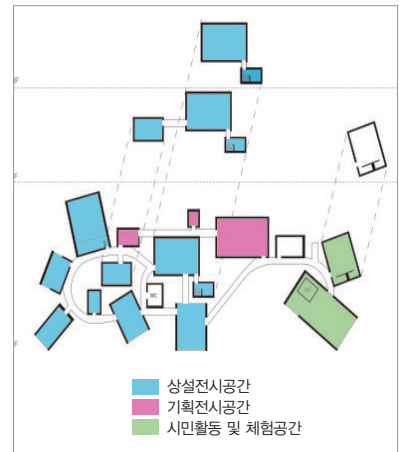
■ 토와다시 현대미술관

개관이념 및 배경

토와다시는 '감동·창조도시·사람이 빛남, 자연이 빛남'의 개성이 빛나는 이상향'을 미래도시상으로 내걸고, 자연·마음·살림살이·일·시민 '감동·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토와다시현대미술관은 이런 미래도시상을 바탕으로, 현대예술을 활용하여 시민활동·시민문화·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나의 기본 이념과 3개의 활동이념을 내걸고 감동과 창조의 원동력이 있는 'Art Towad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예술의 감동을 공유하는 마을 토와다를 세계에 발신하고, 현대예술에 의한 마을 활성화, 시민은 물론 토와다시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함께 행복한 공간이 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 자료 :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홈페이지
토와다시현대미술관 건물배치

2008년에 개관한 토와다시현대미술관은 ‘Arts Towada’ 핵심시설로서 마을만들기와 예술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에 기반하여 탄생되었다. 본 미술관은 예술을 통한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열린 시설로,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21인의 예술가들의 커미션워크(commission work)전시와 그 밖에 예술문화활동 지원과 교류를 촉진하는 거점시설로 상설전시공간, 기획전시공간, 체험공간 및 시민활동공간, 야외이벤트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관의 특징은 각각의 전시공간이 ‘예술을 위한 집’으로 독립되어 있고, 부지 내의 건물을 분산배치하고 유리 복도로 이어놓았다는 것이다. 각 전시공간을 독립 배치하여 각각의 예술작품에 맞춰 건축공간을 만들어내고, 서로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산형구성은 광장과 건물이 서로 연결하는 관청가 거리의 특징에 착안하여, 예술작품과 도시가 유기적으로 혼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건물은 크고 작은 볼륨을 만들어 내고, 크고 작은 건물에 연속성을 부여하여 거리풍경과 일체감을 가지도록 하였다. 게다가 이 분산 배치에는 야외전시공간과 이벤트공간이 만 들어져 있어서, 방문자는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예술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은 여러 방향으로 커다란 유리문이 나 있어서 예술작품이 마을을 향하여 전시되고 있는 듯 한 개방적인 구성이 된다.

활동 및 예술작품

감동을 부르는 예술체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현대 예술의 숨결을 전달하면서, 참가형 이벤트 등 마을과 일체가 되는 사업을 전개하는 시민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예술에 근간한 지역만들기에 대처하고, 개척하고 도시창조의 역사를 미래에 함께 연결하고, 국제적인 전람회나 이벤트를 실행하는 여러 외국과도 교류하여 시민문화를 높인다.

관광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운영, 국외에서 수집한 작품과 함께 풍부한 자연경관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예술·디자인의 보급에 의한, 창조적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지역경제를 부흥하게 한다.

‘Arts Towada’에는 토와다시의 현대미술관과 관청가를 관통하여 ‘도시, 자연 그리고 예술의 공생’ 과 ‘예술을 통한 경험’을 컨셉으로 하여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예술작품을 설치되어 있다.

미술관에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21인의 아티스트들이 도시와 자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22개의 예술작품이 전시되고 있고, 또한 예술작품은 미술관을 위해 제작되어,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예술작품과 공간이 깊게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예술작품은 전시실뿐 만 아니라 옥내외의 모든 공간에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예술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미술관 실내 전시공간



미술관과 연결된 야외공간



예술광장과 스트리트퍼니처

예술광장은 토와다시 현대미술관 근처 3개의 큰 공터를, 예술을 이용하여 공원화한 광장으로 체험형 대형 아트워크가 전시되어 있다.



옛 관청가의 이미지를 살린
스트리트퍼니처



* 자료 :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스트리트퍼니처와 주변환경



또한 관청가를 관통하는 보행도로에는 아티스트와 건축가들에 의해 벤치형의 스트리트퍼티쳐(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어, 보다 매력적인 예술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관청거리를 걸어 다니며 예술작품을 즐기면서 관광을 할 수 있고, 관청가에서 주변거리로 연결되어 'Arts Towada'의 효과를 파급시키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예술광장



'Arts Towada'의 예술을 접목한 마을만들기는 시골의 작은 도시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누가 올 것이나고 우려했지만, 미술관과 주변을 하나의 컨셉으로 장소 디자인 하고,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금은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미술관을 둘러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미술관을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미술과 예술을 생활 속에 끌어들이므로써 친근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마을만들기와는 달리 지역리더인 시장(市長)의 아이디어와 행정의 노력으로 주민의 마음을 열고, 시작 단계이지만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지역리더의 중요성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또 다른 방법과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 ◀

〈참고자료〉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홈페이지(<http://towadaartcenter.com>)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홍보 판플렛
토와다시현대미술관 사진 엽서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홍보 PPT(토와다시 내부자료)
연구자 촬영 사진 등

* 본 글은 2015년 충남연구원 국외출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관계자 인터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모색

도·시·군 간 공공갈등관리업무협약을 중심으로

고 승 희 _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1.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추진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비단 어느 한 지역 또는 기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법적 제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결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두 개의 자치계층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상 나타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조화와 협력적 관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들이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도적 방안들도 강구되고 있으나 이의 성과는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협력적 관계의 구축은 지역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기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수단이 필요시 되며 협약은 행정행위를 보충하는 효율적 수단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의 제도화를 위해 중앙정부

에 각종 현안들을 발굴하여 건의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충청남도 차원에서 도와 시군의 기능과 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조정하기 위한 사업들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충청남도 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업무들이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히, 공공갈등의 예방과 관리업무는 도와 시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도시·군 협약을 통한 대응방향을 살펴본다.

2. 협약의 개념과 요건

1) 협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행정구역 내에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본질로 하지만 현대 행정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수혜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역과 기초의 관계에서는 업무의 중복 뿐 아니라 추진 주체에 대한 이견도 흔하게 발생되고 있다. 중첩되는 권한과 이익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사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적어도 협력에 의한 수행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는 행정수행의 효율적 체계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행정사무처리와 관련된 협약은 광의와 협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넓은 의미로서 협약은 기관 간 사무처리의 내용 및 방식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된 계약적 형태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사무의 공동처리를 포함하여 사무위탁, 협의체 설립, 인사 및 정보교류,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협력적 형태가 포함될 수 있다. 즉, 협약은 기관 간 공동적 관련 사무를 계약의 형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군 협약사무의 대상과 근거

도시·군 간의 협약은 지방분권에 대한 협력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분권과 협력은 반대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관계로서 지방분권이 강화될수록 행정주체 간 연결고리로 협약도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군 간 협약을 통해 기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처리가 곤란하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공동처리함으로써 기능과 사무배분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협약의 대상사무는 기본적으로 도와 시·군 간에 있어 공통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사무로서 공동수행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광역의 사무인지, 기초의 사무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사무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력 추진 시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 등 행정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무,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지역 간 갈등예방 및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도시군간의 협약에 관한 제도적 근거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47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 14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 처리에 관

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업무의 광역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절차로는 먼저, 협력대상 사무를 판단하며, 업무협의를 한 후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협력대상사무 판단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추진 시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 등 행정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무,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지역 간 갈등예방 및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가 대상될 것이다. 업무협약에 있어 진행방법 및 절차 등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비용부담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별 부담 금액, 집행방법 등의 논의를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MOU 체결 및 협동의 공문서 발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도·시군 협약의 성립요건 및 이행

일반적으로 협약은 당사자 간의 협력, 특히 의사의 합치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성립요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만 충족하면 족하다. 그러한 점에서는 공법상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먼저, 권한상의 요건의 경우 협약 자체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에 계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무별 협약의 당사자를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입법적 규율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은 있지만 협약의 의미가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한 협력적 사무수행인 점, 그리고 해당 사무에 기본

적인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으로 인해 권한상의 요건문제는 엄격하게 고려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협약형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합의내용을 명백히 한다는 의미에서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협약에 의해 공동처리되는 사무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등이 필요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협약의 절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다만 사무의 내용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산을 수반하거나 조직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에게 이익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협약에 앞서, 협약을 통한 공동처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절차를 사전에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적 타당성 측면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 제도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도와 시·군은 협약의 당사자로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협약은 계약의 본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협약의 이행에 관해서는 사법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당사자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자력강제는 불가능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그러나 일반적 공법상 계약과 달리,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는 본질적으로 공행정의 수행방식이며, 행정주체간의 법률관계인 점에서 본다면, 협약이 가지는 의사합치적 본질에만 근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협약의 이행 및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협약에 있어서도 그 본질이 계약이라는 점에서, 협약의 변경 및 해제의 가능성은 일반적 계약법적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협약의 본질이 지방자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와 시·군간 신뢰관계라는 차원에서만 변경·해제를 논할 수 없으며 주민의 이익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될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 도-시군 간 협약사무 발굴의 기준(원칙)

도와 시·군간의 협약은 지방자치의 본원적 의미인 민주적 자주권이 침해받지 않는 수평적인 협약이다. 이에 협약과제에 대한 명확한 전략 및 비전이 제시되고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과제중심으로 발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신규 사무분야 또는 기존 사무에 보충적으로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분석과 적정한 범위설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필요가 있으며 협약사업의 실제 협약의 체결에 앞서 구체적 지표에 의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에 몇 가지 단계적 이행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 인바, 가령, ① 협약사업의 명확한 목표설정, ② 서비스 제공 방법과 서비스 수준 (가급적 계량화) , ③ 총비용 과 분담비용, ④ 협약의 경제적, 행정적 운영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약사무의 방향은 첫째, 성과창출 가능성으로 도-시·군 간 연계·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야 또는 사무이다. 둘째,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으로 충청남도 지역발전 정책과의 부합성, 구체성,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 분야 또는 사무이다. 셋째, 창의성으로 기 추진되던 분야와 유사·중복되지 않는 분야 또는 지역 특성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또는 사무이며 마지막으로 연계 및 협력성으로 도-시·군 간 합의 수준, 사업 추진체계, 연계협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협약사무 발굴의 방향을 바탕으로 협약체결의 원칙은 첫째, 도-시·군간 민주적, 자율적인 협약체결로 행정주체 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 합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체결해야 한다. 둘째, 보충적 수단으로서 기존의 법적 시스템만으로는 상호 협력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협약을 추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분권적 상생협력발전 추구로 중앙 의존형 관행에서 탈피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분권적, 자생적 지역 간 상생 협력과제의 발굴로 실천적인 지방자치 구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발굴과제의 방향 및 원칙을 바탕으로 협약체결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기 준	내 용
통일성	도-시·군이 공통으로 추진할 사항 도-시·군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
파급성 (효과성)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적인 사항 도-시군 상호협력의 시너지효과가 큰 사항 기타 도-시군 공동추진이 효과적인 사항 등
보충성	도-시군 사무 중 단독추진 시 행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되는 사항
활용성	주민생활권 단위로 생활시설의 공동활용이 효율적인 사항

3.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협약의 필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

1)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협약의 필요성

충청남도와 시·군의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협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갈등의 지속적 분출과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구조가 분화되고 이해관계가 다원화 되면서 각 분야에서 공공갈등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으며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행정적·사법적 해결방식으로는 갈등해결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른 시민 참여·권리의식 향상으로 각종 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공갈등은 지역 간의 비선호시설의 입지, 철도역사 등 선호시설 건립을 둘러싼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으로 지역 간의 분열을 초래 할 우려가 크므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능률편향적인 정책과정을 시정하고 주민의 요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즉 갈등주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갈등관리방식의 변화 필요하다.

셋째,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복잡화된 갈등의 원인은 갈등의 주체인 정부와 주민간의 불신에서 비롯된다. 효과적인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달성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보장을 토대로 공공의사결정과정에서 초래 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관리·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필요하다.

다섯째,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갈등으로 인한 각종 소송 등으로 과도한 비용 지출은 물론 행정 신뢰성 결여로 지역주민 불신 초래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요구된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갈등 해소 역량이 미흡하여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어 갈등전문 인력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여섯째, 갈등 사안이 광역화 되어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갈등의 양상이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일정지역을 초월하여 광역화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역 간의 경쟁구도는 물론 지역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발생되는 공공갈등 증가로 지역 간의 분열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및 컨트롤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갈등관리의 문제와 현상은 어느 한 기관 및 지역 단일의 대응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며 도와 시·군 모두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에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2)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사업의 주요 현황

① 갈등관리 정책 및 현장지원

충청남도는 2014년 12월 30일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조례 제 3943호)를 전면개정·공표 하였으며, 현재 도내 15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한 상태로서 제도의 골격은 갖추었으나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계기관의 협의(협조)·협력, 사안별 대응을 위한 체계적, 효율적 대응은 미흡하여 도 각 부서와 시·군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충남형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5년 조직개편을 통하여 갈등의 진단·예방·조정·관리 기능을 담당 및 총괄하는 갈등관리팀(5급 1명, 6급 2명, 9급 1명)을 신설하고 공공갈등진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② 공공갈등의 선제적 대응

공공갈등의 기술검토,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갈등조정협의회 지원, 갈등현안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기존 갈등현황의 점검과 모니터링 수준에서 벗어나, 갈등 전·후 사안별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대응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③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 시·군 갈등관리조례에서는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3년부터 갈등관련 전문가,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말 기준으로 6개 시·군(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예산군)이 갈등관

리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④ 공공갈등 현안 정책연구

도·시·군의 주요 사업 중에는 갈등유발요인의 정책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갈등유발요인들의 적실성 및 정확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갈등영향분석 연구, 갈등관리 기획과제 연구 등을 수행, 갈등유발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및 지역주민 의식 파악, 쟁점 및 이해당사자 분류, 원인과 해결의 수단·방향등을 도출하고 있다.

⑤ 갈등관리 현장 지원

공공갈등 발생시 갈등사안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관리체계 수립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지원 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 도 갈등관리시스템 및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군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합의형성과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있다.

⑥ 갈등관리포럼 운영

충청남도 갈등관리시스템의 특징은 외부 전문가 집단과 협력파트너십 구축에 있으며, 2006년 10월 포럼 구성 이후 현재까지 민·관협력체제를 모범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2007년 5월부터 충남연구원 포럼 사무국을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포럼을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갈등관리 교육을 시행중에 있으나 여러 제도와 재정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3)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협약을 위한 도·시·군의 역할과 기능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의 공공갈등관리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의 역할과 기능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주요 갈등현안을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갈등진단 및 영향분석을 통해 갈등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갈등현안 정보 및 갈등 해결 사례 매뉴얼 작성 등 정책결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정책결정 이후까지 정책추진의 전 단계에 걸친 상시적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도 필요하다. 충청남도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의를 통해 합의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고 갈등 조정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관리에 민·관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운영,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규제협상, 시나리오워크숍 등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갈등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조례에 의해 '갈등관리포럼'을 운영 중에 있으며, 포럼을 통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부분 전문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갈등 해결 방식으로 협상, 조정, 중재 등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갈등 해결능력 배양 전문교육도 필요하다.

시·군의 역할과 기능으로 시·군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시·군별 공공갈등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각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갈등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자인 시·군은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로써 갈등전담팀 도입, 갈등관련 예산운영, 갈등영향분석 활용 등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들의 갈등관리 교육참여를 위한 제도마련도 필요하다.

4. 마치며

협약을 통한 충청남도의 공공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약의 실행을 위한 도와 시·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의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대의 형성이다. 갈등관리의 필요성과 협약에 대하여 도와 시·군 모두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갈등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주민참여도 확대되어야 한다. 공공갈등관리는 단순한 행정사무의 처리가 아니다. 사무의 대상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바탕으로 협약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이론적·기술적 역량을 갖춘 갈등 전문가의 확보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의 추진 과정에서 갈등관리 전문가, 지역주민이 갈등의 중재 및 협의의 주체로 참여하여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갈등관리 기구 및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도, 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전

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며 재원부담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갈등관리가 협약을 통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분명 협약은 갈등관리의 중요한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하는 분명한 의식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갈등관리와 해소에 충청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한다. ◀





국내 지정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

홍수열 _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1. 서론

지정폐기물 매립장 입지문제를 둘러싼 사업자와 지역주민, 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지정폐기물 매립을 위한 민간 매립장이 최근 충청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충청지역에서 입지 갈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상 주로 인구 밀도가 낮고 반대민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허가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의 농촌지역 주민들과 민간사업자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매립시설이 국가 폐기물관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설치를 원하지 않는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입지갈등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입지갈등의 양상은 단순한 주민과 민간사업자간의 다툼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 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지정폐기물의 개념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구분은 폐기물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일반폐기물은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을 말하며, 지정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을 말한다. 유해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식성, 인화성, 폭발성, 감염성, 생태독성 등 유해물질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했기 때문이다.

지정폐기물이란 용어는 유해폐기물 혹은 유독폐기물이란 용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중화시킨 개념이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이란 용어가 주는 느낌과 '유독폐기물 매립장'이란 용어가 주는 느낌을 비교하면 왜 국가에서 굳이 지정폐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정폐기물은 의료폐기물과 기타지정폐기물로 구분한다. 의료폐기물은 병원 등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와 접촉한 폐기물이나 환자의 몸에서 적출한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은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이나 기타지정폐기물과는 완전하게 격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지정폐기물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소각재, 폐슬러지 등이다.

3.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3년 기준으로 국내에는 연간 438만 톤의 지정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87만 톤이 매립(20%)되고 있다. 재활용되는 양이 많기는 하지만 매립비율도 매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타지 않는 폐기물(불연성 폐기물) 중 중금속이 물에 녹아서 많이 나오는(용출되는) 폐기물이다. 소각재, 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폐슬러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한 비산재나 폐흡착제 등을 말한다.

납이나 비소, 6가크롬,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이 중금속이 물에 녹아서 매립장 침출수로 나와서 지하수나 지표수 등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일반매립시설에 비해 더 엄격한 시설기준을 가진 매립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는 나오지 않는 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산업시설에서 제품의 생산이나 오염물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따라서 지정폐기물은 대규모 공단이나 대규모 산업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이나 영남 지역에서 지정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은 지정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소규모 용량의 1곳 밖에 없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매립을 타지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우 높은 편이다.

지역별 발생량을 보면 수도권 지역이 25.5%, 부산·



울산·경남 지역이 23.3%, 충청지역이 16.3%, 대구·경북지역이 16%를 차지하고 있다. 매립폐기물 기준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29.5%, 수도권 지역이 28.4%, 대구·경북지역이 9.3%, 충청지역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전국에 17곳이 있으나 그 중 수도권 지역은 1곳 밖에 없으며, 충청지역은 충북 2곳, 충남 1곳이 있다. 매립용량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 매립장은 전국 총 매립용량의 1.4%에 불과하며, 충청 지역 매립장 3곳을 포함하더라도 6.2%에 불과하다.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매립되는 폐기물 기준 37.2%가 발생하고 있지만 매립용량은 전국

매립용량 기준 6.2% 밖에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매립장의 잔여용량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3.4%, 충청 포함 8.5%로 다소 비율이 높아지지만 지정폐기물 발생비율 대비 매립용량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이와 같이 수도권과 충청지역은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많지만 매립시설은 태부족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립시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만약 매립시설 설치허가만 받을 수 있다면 땅짚고 헤엄치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류의 장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충청지역에 매립장 허가신청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4. 지정폐기물 매립문제 해결방안

지정폐기물 매립문제, 특히 수도권에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지역에 민간매립장 설치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근본적인 방안으로 매립대상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생산단계에서 청정생산 등 생산기술 혁신을 통해서 유해물질의 사용최소화와 원료사용 절감을 통해서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정생산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저렴한 매립가격이 상승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매립처분세 도입도 이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문제는 배출지역책임 원칙의 관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둘째,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국가 혹은 공공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민간에서 관리할 경우 수익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매립시설 설치 및 관리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고, 최근 제천 왕암동매립장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매립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의 세금으로 결국 메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정폐기물 관리주체의 문제는 1990년대 배출자책임원칙에 근거한 민간관리방식으로 갈 것인지 국가관리방식으로 갈 것인지 논쟁이 벌어졌으나 1997년 IMF 사태 이후 민간관리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민영화 흐름에 따라 기존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도 모두 민간에 매각되었다. 따라서 이미 민간처리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처리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주체를 민간으로 하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공공의 역할강화 및 민간매립시설에 대한 현행 규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제천 왕암동매립장 사건은 1999년 이후 강화된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관리규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립시설 운영 혹은 사후에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험제도 도입 혹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보완 등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발생지역 책임원칙의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폐기물 처리를 타지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경부정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배출자 책임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지역의 집단적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폐기물 배출시설의 입지에 따른 고용과 세수증가 등 편익은 그 지역에서 누리면서 폐기물 처리의 비용은 타지역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순히 배출자 책임원칙으로만 해결될 문제

가 아니라 배출자의 개념을 확대한 배출지역 책임원칙이 필요하다. 배출지역 책임이란 배출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되 처리시설 확보가 어려울 경우 타지역의 처리시설에 처리하되, 타지역 처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문제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원칙 중 하나가 바로 최근접결정의 원칙이다. 지역의 환경문제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의견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정리 폐석면광산 지역에 매립시설이 들어서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석면광산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의 상황이나 정서가 진지하게 고려되었고,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사업자가 폐석면광산지역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생각을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갈등은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진지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5. 결론

정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약할 수 있는 규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국가가 개입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갈등해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낙후된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와 사업자가 지불할 수밖에 없다.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폐

기물관리의 효율성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 문제가 결여된 접근방식은 효율적이지도 않다. 폐기물배출지역 책임원칙의 강화와 매립시설 관리에 대한 규제강화, 지역주민 참여 보장 등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선진국 문턱의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류 순 열
세계일보 선임기자

대한민국은 경이로운 나라다. 눈부신 압축 성장으로 후진국에서 벗어나 어
느새 선진국 문턱을 밟고 있으니 말이다. 절대 빈곤에 허덕이던 시절이 그리 먼
과거가 아니다. 한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한국은 많은 이들이 끼니를 걱정
하던 가난한 나라였다. 온 식구가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끼니마다 형제들간 반찬
싸움을 벌였으며 몽당연필도 버리지 않고 불펜 껍데기에 끼워 쓰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빠르게 가난의 굴레를 벗고 선진국 문턱을 밟았는데, 우리는 지금 행
복한가. 헐벗은 채 악다구니를 쓰며 살던 그 시절에 비해 행복한가 말이다. 역설
적이게도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선진국 문턱을 곧 넘을 거라는 대
한민국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원국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말해준다. 한계 상황에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 삶
을 포기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 것이다.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나을 거
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다면 그들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난했던 그 시절엔 그래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집단적 확신이 있었다.

자살률 말고도 불행을 증명하는 상징과 파편들은 널려 있다. 지난 5월 발표
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노인층 빈곤율은 49.6%로 회
원국중 최고다. OECD 평균 12.6%와 비교가 무색할 만큼 높은 수치다. 저출산

은 또 어떤가. 결혼하는 것도, 결혼을 하고도 아이 하나 낳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그런 세상이다.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보니 아이 낳기를 꺼리는 세태가 된 것이다. 고비용·저효율 사회에서 젊은 세대는 그렇게 폐기를 잃어가고 저출산·고령화는 미래 재앙으로 우리앞에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에 육박하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일까. 왜 10분의 1도 안되는 2000달러 수준일 때보다도 결혼하기 더 힘들고, 아이는 잘 낳지 않으며 자살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인가.

이 같은 역설은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행복과 희망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학생들의 행복이 반드시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국민 행복도 GDP순이 아닌 것이다. GDP는 경제성장의 총량일 뿐 성장의 질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의 형평성이나 복지수준 같은 삶의 질은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성장과실의 분배 통로가 막혀 있다면 GDP는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수 없는 허수에 불과하다.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국민행복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 것이다.

경제지표가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은 나라중 행복 지수가 더 높은 나라가 적잖다. 세계은행(WB)이 집계한 201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보면 한국 2만5920달러, 칠레 1만5230달러, 브라질 1만1690달러, 멕시코 9940달러다. 국민소득으로 보면 한국이 월등하게 앞서는 1위다. 그러나 행복지수로 보면 이들 4개국의 국민소득 순위가 정확하게 뒤집어져 한국은 꼴찌로 떨어지고 멕시코가 1위로 올라선다.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중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지수를 보면 한국은 6.0으로 36개국중 25위다. 칠레는 6.6으로 23위, 브라질은 7.2로 13위이며 멕시코는 7.4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국민소득이 절대적으로 많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은 크다. 삶의 만족도 지수가 7.8로 1위인 스위스는 1인당국민총소득이 8만6600달러, 2위인 노르웨이는 10만2610달러로 한국의 4배 안팎에 달한다.

그러나 이 역시 결정적 조건일 수 없다. 인도와 중국 티베트자치구 사이에 있는 인구 75만여명의 소국 부탄은 100명 중 97명이 “나는 행복하다”고 답할 만큼 행복지수가 높다.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2500달러 정도로 한국의 ‘가난했던 시절’과 비슷하다. 부탄은 1972년부터 GDP 대신 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국가발전의 잣대로 삼고 있다. 이를 관장하는 정부명칭도 ‘국민총행복위원회’인데 우리로 치면 장관급인 해당 위원장은 늘 언론 인터뷰에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조화를 중시한다”고 말한다.

총량지표와 행복지수의 괴리는 무엇보다 양극화로 표현되는 분배 불균형과 관련이 깊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서 총량지표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소외감과 박탈감이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3년 1인당 GNI가 2869만5000원이라고 하지만 이중 가계가 온전하게 챙기는 액수는 1608만6000원으로 56%에 불과하다. 국민 개개인에게 의미가 있고 실감하는 수치는 2869만원이 아니라 1608만원인 것이다. 가계가 챙기는 과실의 비율이 OECD 평

균(62.6%)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선진국의 가계 몫 비중을 보면 미국이 74.2%, 독일 66.1%, 일본 64.2%이다. 한국은 이 비율이 1980년 70.7%→1990년 66.7%→2000년 62.9%→2007년 57.6% 식으로 줄곧 떨어지는 흐름이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가계 빈혈”이라 칭하고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성장 시대에 GDP 증가율은 곧 일자리이고 소득이었다. 그러나 저성장·양극화 시대를 맞아 GDP와 관련 지표들은 일반대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GDP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양만 나타낼 뿐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질 나쁜 성장을 해도 GDP는 증가한다. 예컨대 사교육비가 치솟고 흡연과 질병이 늘어도 GDP는 올라간다. ‘평균의 함정’도 있다. 국민 90%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상위층 10%의 소득이 급증하면 평균소득은 올라가듯 성장률이 상승한다.

결론적으로 양극화 세상에서 GDP와 같은 거시경제 지표는 국민의 보편적 삶을 말해주지 못한다. 경제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GDP 증가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국민들을 더 못사는 사회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게 2010년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양적 성장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적 성장조차도 더 이상 어려운 데 말이다. 경제 인식과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단지 GDP숫자가 아니라 국민행복과 희망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갖고 결혼도 하며 아이도 두려움 없이 낳을 수 있는 세상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사회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법 : 디지털 시민성 교육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 사회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개인, 집단이나 조직, 사회,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은 소통과 생활방식, 그리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도래는 시민성의 함양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기존의 미디어가 가지는 한계가 디지털 미디어의 쌍방향성, 상호운영성, 그리고 정보 대역폭과 정보 다양성의 증가 등 기술적인 특성들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개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미디어의 이용자가 단순히 정보의 수용자가 아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보를 운용하고 교환하며, 논의하는 속의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혹은 전자 시민성(e-citizenship)은 이러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통해 정치 공동체에 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

다는 기대를 반영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둘러싼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변화가 시민성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다분히 희망에 찬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도래가 시민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일단의 연구들은 이런 기대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늘 등장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했다. 이것이 기술에 의한 고유한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 사회구조나 개인의 속성 때문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적어도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부정적 사회현상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사회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격차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측면에서도 새로운 문제점들이 확인된다. 디지털 공간에서 유통되는 많은 정보들은 공공의 이익과 동떨어진 상업적이고 오락적 정보들이 범람하고,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여론 과정은 파편화되고 극단화되어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터넷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문제해결 방식은 부정적 사회 현상에 대한 과잉 우려와 이에 대한 타율적이고 제도적인 규제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국가에 의한 행정적 규제를 의미하며, 규

제의 목적성과 무관하게 타율적 규제 행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한시키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 논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은 정보의 제작·생산, 유통·배포 기능이 선택적이고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분산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경직성이 높은 법률과는 현실적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타율규제는 규제 대상의 변화 속도를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 비용과 부작용, 우회 서비스 등으로 인한 낮은 규제효과 등의 문제를 노출시키기만 했다.

제도적 접근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인터넷실명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4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에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이고 행정기구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은 디지털공간에서 민간 영역의 자율적 소통 및 자율 역량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참여자인 개인 즉, 시민의 덕목과 참여 능력인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인터넷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인터넷 역기능 예방에 모아져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정책적 목표가 부재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교육이나 예방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행된 교육의 유형을 '처방교육, 예방교육, 생산활동교육'으로 구분해 볼 때 대부분의 교육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 발행하는 문제에 대한 처방적 교육과 예방적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생산적인 참여 학습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반면 유럽연합은 참여적 시민 능력을 전제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모델을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통합이라는 공동의 정책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수행 방안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적 차원으로 수립했는데 이는 한국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민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시도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시민의 참여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디지털 담론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시민성 함양에 대한 한국 사회의 체계적인 정책은 매우 부족하다.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

고, 학술적 차원에서도 그 논의가 빈약하다.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시민의 조건이나 능력을 논의하지 않고 부정적 현상에 대한 처방적 정책이나 시도들이 이어졌다.

체계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개념을 합의하고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호스킨스와 동료들(Hoskins et al., 2006)이 제시한 시민능력 지수는 참조할만한 유용한 자료이다. 학계와 정책당국이 협력해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시민능력을 개념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모델'에서 '협업적이고 참여적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협업적이고 참여적 모델이란 교육 주체의 다양화 및 협력화, 그리고 교육 대상의 참여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 수요자가 아닌 콘텐츠 공급자로서 일선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 중, 고, 대학 등 제도권 교육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교육기관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콘텐츠 공급자이기도 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의 설계 시 교육 대상기관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오픈 코스웨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들 주체들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정책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콘퍼런스 개최, 콘텐츠화가 우수한 교육자료 개발, 교육 평가 및 보상 시스템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맞는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은 필수 요구 사항이다. 책임 있게 양질의 교사 연수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동시에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교육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도권 규제완화 뚫고 12개사 유치 성공

충남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뚫고 수도권 7개사를 포함, 모두 12개 유망기업으로부터 2700억 원에 가까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안희정 지사는 5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시덕 공주시장 등 7개 시·군 시장·군수, 조경희 (주)바디프랜드 대표 등 12개 기업 대표이사과 함께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12개 기업은 도내 7개 시·군 산업단지 내 46만 7286㎡ 부지에 모두 2674억 원을 투자,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거나 새롭게 공장을 설립한다.

우선 공주지역에는 (주)바디프랜드와 (주)원스텐, 성화전기공업(주) 등 3개 기업이 새 터를 잡는다.

안마의자 전문 생산 기업으로 유명한 (주)바디프랜드는 2018년까지 272억 원을 들여 월미2농공단지 내 3만 5306㎡의 부지에 신규로 공장 세운다.

스테인리스 스틸파이프 제조기업인 (주)원스텐은 탄천산단 1만 8942㎡의 부지에 2017년까지 105억 원을, 송전용 철탑을 생산하는 성화전기공업은 탄천산단 9만 2303㎡에 2018년까지 215억 원을 투입해 각각 공장을 신설한다.

반도체장비 업체로 수도권에 위치한 (주)나우이엔지는 2017년까지 아산 제2테크노밸리 내 2만 5236㎡의 부지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기로 하고, 총 135억 원을 투자한다.

또 인발파이프 생산 기업인 광성장광공업(주)은 2018년까지 137억 원을 들여 수도권에 위치한 본사 및 공장을 서산인더스밸리 내 3만 3057㎡ 규모의 부지에 이전한다.

냉간압연재를 생산하고 있는 (주)대흥코스텍은 당진 송산2산단 1만 6528㎡의 부지에 공장을 신규 설립하기 위해 207억 원을 투입하고, 페인트 제조업체인 한진화학(주)은 당진 합덕산단 2만 8379㎡에 2018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이전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 프린터 전문기업인 (주)우심시스템은 홍성 일반산단 3만 4755㎡에 2018년까지 280억 원을 투자하고, 상업용 냉장설비 전문업체인 오텍 캐리어냉장(유)은 예산 고덕농공단지 3만 1665㎡에 내년까지 117억 원을 투입, 수도권에 있는 본사 및 공장을 각각 옮긴다.

이밖에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A기업은 300억 원을, B사는 400억 원을, C업체는 280억 원을 각각 들여 천안과 아산 지역에 3만 6000㎡~6만㎡ 규모의 공장을 새롭게 건설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협약에서 12개 기업들은 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도 약속했다.

도는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 도내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생산 유발 3623억 원,

부가가치 유발 1340억 원, 고용 유발 2260명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2855억 원의 생산액과 637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신규 고용 창출은 1695명으로 전망했다.

‘자원 풍성한 충남’ 신·재생에너지 키운다

충남도가 환경위기 극복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도내 연간 전기소비량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민자투자 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 허가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와 검토보고서 개선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총 1864곳에서 추진돼 생산가능용량이 623 MW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1331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해 허가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불이행 과징금 부과에 따른 발전사들의 구매수요 증가, 태양광 모듈 등 단가 하락 등의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도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이 전체의 76%를 차지해 가장 활발했으며 이어 바이오에너지(19%), 소수력(4%) 순으로 나타났다.

발전규모별로는 REC 가중치에 따른 저용량 선호 양상으로 500kW이하 허가건수가 1667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태양광 보급이 용이한 평야지역인 논산(354건), 부여(216건), 공주(160건), 서천(156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이 활발하며 산지가 많은 계룡(4건)과 청양(52건)은 부진한 실정이다.

도는 현재 도내 연간 전기소비량(4만 5466GWh)의 2%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오는 2020년까지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도는 태양광에 편중된 신·재생에너지를 농산부산물과 축산폐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해 투자기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또 현행 전기사업법 범주 내 허가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발전 사업허가 문턱을 낮추고 허가 검토보고서 등의 개선으로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타 시·도 및 산업부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

과 정보공유를 통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는 농산부산물과 축산폐기물 등 바이오 에너지 가용잠재량이 매우 높아 사업

자들의 참여의지가 강한 지역”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민자투자 유치를 통해 충남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경제비전, 도민과 함께 완성한다.

충남도가 ‘충남경제비전 2030’을 도민과 함께 완성하기 위해 시·군 순회설명회에 나섰다.

충남경제비전은 21세기 환황해 아시아 경제시대 충남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전략으로,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충남경제의 15년 후(2030년) 비전을 제시하고,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 지방재정 등을 고려한 실행전략을 담게 된다.

설명회는 5월 26일 태안군, 27일 서산·천안시, 6월 2일 예산군·아산시, 4일 홍성군, 5일 서천·금산군, 8일 공주시, 9일 청양·부여군, 10일 보령·당진시, 11일 논산·계룡시 등의 순으로 펼쳐졌다.

각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 관계 공무원 등이 참가하며, 충남경제비전 초안 설명에 이어 토론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되었다.

충남경제비전 초안은 ▲창의적 인재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수소밸리 조성 등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등을 통한 ‘창조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복합주거문화 휴양도시 조성 등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세계 경쟁력을 갖춘 지역별 특화산

업 육성 등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서해안을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 거점으로 조성 등 5대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시·군 설명회와는 별도로 충남경제비전 초안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6월 15일까지 의견을 들었다.

이와 함께 도내 중견 기업인과 대학 산학협력단장,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 충남경제비전에 대한 공감대와 실효성을 높여 나아갈 계획이다.

도는 충남경제비전 수립을 위해 학계와 기업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충남경제비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지사·이장우 경북대 교수)를 가동 중이다.

또 도 경제산업실에 경제비전TF팀을, 충남연구원에 경제비전연구단을 각각 구성, ‘민+관+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6월 말까지 충남경제비전을 마련, 오는 7월 9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팎에 알리고,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충남연구원, 2025 비전 선포 등 개원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 CNI)이 개원20주년을 맞아 2025 비전을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은 지난 6월 12일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 개원2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선포하고,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로 ▲지역을 위해 열정과 책임을 다하는 연구자 ▲함께 지혜를 모으고 나누는 네트워크 조직 ▲현실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연구 ▲도민이 신뢰하는 최고 정책 연구기관 등을 설정했다.

강현수 원장은 기념사에서 “충남연구원은 도민 체감형 연구 수행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지식 정보의 생산과 교류, 확산과 저장의 플랫폼 역할을 선도하겠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연구원이 좋은 연구성과도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연구역량 강화와 운영시스템 개선에도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미래’





를 주제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은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충남의 현재를 짚어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장이었다.

충남연구원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주제발표에서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대외 경쟁력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초국경 협력의 주도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융복합화·체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용웅 전충남연구원장의 좌장으로 강봉룡 목포대 교수, 강희정 한밭대 교수, 백낙구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원갑 충남도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백낙구 행자위원장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과연 충남에도 긍정적인 영향만 끼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교류협력하기 보다는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창재 연구위원 역시 “환황해권의 정의를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교류협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실질적 성과에 도움이 되는 협력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개원행사는 최근 번지고 있는 ‘메르스’ 예방 차원으로 예정되었던 외부인사 초청을 자제하고 연구원 내부행사로 대폭 축소·개최되었다.

충남연구원, “마을 만들기를 위해 알아야 할 28가지” 발간

— 두 번째 현장총서 시리즈로 목원대학교 장수찬 교수가 번역작업

충남연구원은 마을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경험적 요인들을 담아낸 “마을 만들기를 위해 알아야 할 28가지(저자 ‘폴 매티시’, 역자 ‘장수찬’)”를 발간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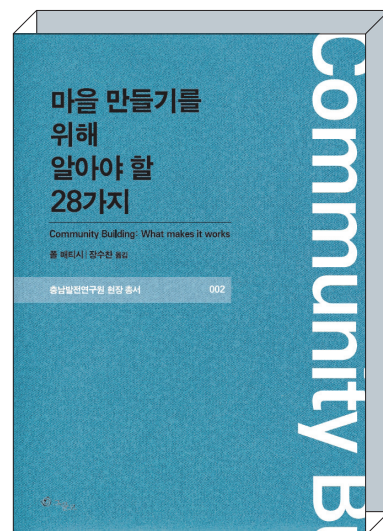
이 책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동시에 보는 관점을 요구하며, 마을의 사회적 역량이 무엇인지 또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려 준다.

미국 와일드연구소장으로 활동중인 ‘폴 매티시’ 등 연구자들은 525개 마을 만들기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1차로 48개 사례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를 위한 28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해낸 것이다. 즉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원칙을 제시하는 책은 많았지만, 이처럼 수많은 경험 사례들을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마을 만들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먼저 이 책의 구성은 마을 만들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28가지 요소들을 소개하면서 각 요소마다 마을 활동가들을 위한 질문을 담아 실제 활동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 준다. 또한 28가지 요소와 질문들을 한 눈에 보면서 메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실었다.

번역을 맡은 목원대 행정학과 장수찬 교수는 “이 책은 마을 리더나 활동가들에게 마을 만들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익히고 학습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등 마을공동체 복원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인권 도시 만들기”로 시작된 현장총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남도정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다.〈발간 : 도서출판 그물코, 160쪽, 12000원〉



백석올미마을 농촌활동 및 백석올미영농조합 업무협약식

충남연구원은 5월 8일 당진시 순성면 백석올미마을을 방문해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충남연구원 임직원 80여명은 매실농장 견학은 물론 각 조별로 발매기, 사과 적과, 깨 심기 등을 실시하며 마을의 부족한 일손을 거들었다.

특히 이 마을의 백석올미영농조합은 지난해 전국 농업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곳으로 평균연령 75세인 마을할머니들이 모여 매실한과와 매실엑기스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현장 리더 교육, 정책 지원 연구 등 6차산업화 육성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가졌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연구와 현장을 결합시킴으로써 우리 농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세한대학교, 충남 환황해권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 및 워크숍

충남연구원은 당진시에 위치한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와 함께 충남의 환황해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약식과 워크숍을 동시에 개최했다.

세한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양 기관장은 물론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세한대 해양레저학과 학생 등 약120명이 참석했다.

먼저 강현수 원장과 이승훈 총장은 워크숍에 앞서 가진 협약식에서 환황해권 발전을 중심으로 한 도내 현안사업 정책 연구 및 정보 공유 등 4개 분야의 협약안에 서명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워크숍에서는 충남연구원 김정태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의 ‘충남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거점 조성방안’, 해양수산부장정구 해양레저과장의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 세한대학교 최미순 산학협력단장의 ‘다도해권 해양 레저관광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례 연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해수부 장관 구 과장은 “우리나라는 ‘삶의 만족도’가 OECD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며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새로운 창조경제의 보고인 ‘바다’의

가치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리면서 “해양레저산업의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 ▲마리나 산업 육성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수중레저 산업 활성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내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 올해 187억 원을 비롯해 2019년까지 매년 17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만큼, 충남에서도 이에 대한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에는 세한대 김형호 기획처장의 좌장으로 충남연구원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 당진시 신현배 항만물류과장, 세한대 해양레저학과 이영오 교수 등이 참석해 당진시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연구원, “충청중국포럼 닷 올렸다”

— 대(對)중국 교류와 대응전략을 주도할 플랫폼 역할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은 5월 21일 당진시 문예의 전당에서 대(對)중국 교류와 대응전략을 주도할 ‘충청중국포럼’을 출범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충청중국포럼’은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이 사무국을 맡고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 실무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대(對)중국 교류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차원의 대응전략을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충남연구원 박인성 중국연구팀장은 “앞으로 ‘충청중국포럼’은 도와 각 시·군이 교류할 중국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 자문 등을 수행함은 물론, 주목해야 할 중국의 주요 이슈와 동향정보를 정리·해설한 ‘중국 동향과 진단’, ‘허베이-산동통신’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매월 정기적인 포럼도 개최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교류 확대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열린 출범기념 세미나에는 충남연구



원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의 좌장으로 한발대 강희정 국제교류원장, 충남연구원 홍원표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아이홍거(艾宏歌) 주한 중국대사관 교

육참사, 구자익 한국교육교류협회장,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수중 공주대 교수, 오광진 한국경제신문 중국전문기자, 김부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중국연구팀장, 조원갑 충남도 정책기획관, 김덕주 당진시 안전자치국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산동성 룡청(榮成)시와 웨이팡(濰坊)시, 광둥성 둥관(東莞)시와의 교류현황 및 보령시-상하이시 청푸(靑浦)구와 텐진시 빈하이(濱海)신구와의 교류현황 등 대(對)중국 교류 사업추진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포럼 출범식에는 김동완 국회의원,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등을 비롯한 학계,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고모집

www.cni.re.kr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열린마당** 코너에
소개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작성

A4용지 4~5매, 휴먼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보내실곳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충남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840-1123 팩스 (041)840-1129
E-mail : cdipr@cni.re.kr

